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 전병곤 · 이기현 · 신상진 · 이동률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현대일본학회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 전병곤 · 이기현 · 신상진 · 이동률

주관연구기관: 통일연구원

협력연구기관: 현대일본학회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인 쇄 2013년 12월
발 행 2013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통일정책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3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가 격 7,500원
ISBN 978-89-8479-744-4 93340

© 통일연구원, 2013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734-6818 · 사무실: 394-0337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3-26-0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통일연구원
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현대일본학회
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연구	통일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통일연구원	김 동 수 부연구위원 박 영 호 소장/선임연구위원 이 기 현 부장/부연구위원 임 강 택 실장/선임연구위원 전 병 곤 소장/선임연구위원 조 한 범 선임연구위원 강 동 완 교수(동여대) 김 갑 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김 태 환 교수(국립외교원) 김 현 택 교수(한국외대) 박 인 휘 교수(이화여대) 서 동 주 책임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 상 진 교수(광운대) 이 동 릉 교수(동덕여대) 정 기 응 책임연구위원(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소)
협력 연구 기관	현대일본학회	이 기 태 전문연구위원 (연세대학교 북한연구원) 김 두 승 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송 화 섭 책임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목차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 이기현 · 신상진 · 이동률

I. 서론	1
1. 연구 목적	3
2. 연구 범위	6
3. 연구 방법 및 구성	7
II.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11
1.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13
가.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의 환경과 실태	13
나.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	16
2.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25
가. 對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	25
나.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체계	35
다.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실태	45
3. 전문가 인식조사	86
가.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86
나.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	91
다. 전문가 인식의 특징	123
III. 결론: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에 주는 시사점	127
1.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평가	129
가.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평가	129
나.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평가	131
다.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141
2. 對중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의 시사점 및 과제	143
가.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시사점 및 과제	143
나.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체계와 실태, 시사점 및 과제	146

목차

참고문헌	15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63

표목차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 이기현 · 신상진 · 이동률

<표 II-1>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의 한반도 통일관련 합의 내용	17
<표 II-2>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주체	39
<표 III-1> 한국 공공외교의 정책적 내용 변화	131
<표 III-2>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영역별 특징	140
<표 III-3> 지난 15년간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성과	142
<표 III-4>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정부별 성과	142
<표 III-5>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전제한 한반도 통일 형태	149
<표 III-6>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	150
<표 III-7> 해당국 국민들의 한반도 상황 인식에 대한 기여도	153

그림목차

<그림 II-1> 한·중 국민 간 상대국 호감도 변화추이(평균점수) ……	26
<그림 II-2> 중국의 한국 우선순위 평가: 친미 대 친중 ……	30
<그림 II-3> 중국의 한국외교 우선순위 인식별 호감도 차이(점) ……	31
<그림 II-4> 중국인들의 북한 급변 시 미·중 개입 공·부정 인식 ……	33
<그림 II-5> 중국 전문가의 소속 기관 ……	89
<그림 II-6> 업무 경력 ……	90
<그림 II-7>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	92
<그림 II-8>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	93
<그림 II-9>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	93
<그림 II-10>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	94
<그림 II-11>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	95
<그림 II-12> 한국 공공외교 프로그램별 중요도 ……	96
<그림 II-13> 한국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	97
<그림 II-14>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 ……	97
<그림 II-15>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평가 ……	99
<그림 II-16>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경로 ……	100
<그림 II-17> 중국인들의 한반도 인식과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	101
<그림 II-18> 중국인들의 한반도 인식에 도움을 준 내용 ……	102
<그림 II-19>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대상 ……	103
<그림 II-20>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전제한 한반도 통일 형태 ……	104
<그림 II-21>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 ……	105
<그림 II-22>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분야 ……	106

<그림 II-23>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인 인식	107
<그림 II-24>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108
<그림 II-25>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정책	109
<그림 II-26>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	110
<그림 II-27>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핵심 주체	111
<그림 II-28> 한국 통일공공외교에 긍정적인 국가	112
<그림 II-29> 지난 15년간 한국 통일공공외교 성과	113
<그림 II-30> 정부별 한국 통일공공외교 성과	113
<그림 II-3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평가	115
<그림 II-32> 북한의 핵개발 의도	116
<그림 II-33>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목표	117
<그림 II-34>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중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118
<그림 II-35>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중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은 이유	119
<그림 II-36>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중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이유	120
<그림 II-37> 북핵 정책 수행 시, 중국 정부의 국민 여론 수렴도	121
<그림 II-38>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 주체	122
<그림 II-39>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 특징	122
<그림 III-1>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과제	155



I 서론

1. 연구 목적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국내 및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닌 국제 차원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그중에서도 한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주변4국에 대한 통일외교는 핵심적 사안이다. 특히, 한반도의 분단과 정에서부터 깊이 개입되어 있는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국제사회와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 및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역학관계의 변화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남북한 동시수교 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확대·확산된 자국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인접한 한반도의 분단관리와 통일과정은 물론 통일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통일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배제한 한반도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우리 주도의 평화통일 실현 및 통일한국의 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협력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협력을 어떻게 확보해내는가가 통일외교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는 1992년 수교 이후에야 시도되었고, 그나마도 주로 4강 외교의 일환으로 분단관리에 치중하는 안보외교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또한 탈냉전의 상호의존시대에 걸맞은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방식보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 정부와 관료들 대상으로 한 전통 방식 위주의 통일외교를 수행하였으며, 북·중관계와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도 미흡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는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과 상대적 약소국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해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 들어 각국이 적극적으로 도입, 활용하고

있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¹ 공공외교는 민간부문의 외교영역 확대와 IT의 획기적 발전을 배경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 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타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군사 및 경제력과 같은 경성자원(hard power)을 사용하는 전통외교와 달리, 비정부 차원에서 문화, 가치, 인적자원과 같은 연성자원(soft power)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본국에 대한 호감을 이끌어냄으로써 외교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견국인 한국의 효과적인 외교 전략으로의 수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에 공공외교를 접맥하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핵심 외교 목표인 통일을 지향하는 공공외교모델과 세부 실천방안의 수립과 맞닿아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의 선순환을 추구하려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산시키고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넓혀가는 통일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한 바, 중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접근과 더불어 공공외교적 접근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증진시킴으로써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외교를 통해 기존 전통외교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학술적 연구와 정책적 시도는 아직 초보적이다. 비록 한국의 외교부는 한국 공공외교의 원년(2010년) 설정, 2011년 9월 공공외교 대사직 신설, 2012년 1월 외교부 문화외교국 산하에 공공외교정책과 설치 등 조직을 정비하고 공공외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² 여전히 공공외교의 체계가

¹ 공공외교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공공외교는,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상대방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informing) 이해(understanding)시켜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국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 자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외교 활동”을 의미한다. 이교덕 외, 『중국의 對한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102.

효율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관한 연구도 한국의 일반 공공외교의 현황과 수행체계를 평가하거나 문화자산을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³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통일외교와 공공외교를 접목한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특히, 중국에 대한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⁴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역할자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분석·평가한 후, 효과적인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는 데 있다. 아울러 연구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를 ‘한국 정부 및 민간이 소프트파워를 자산으로 상대국 국민, 그리고 국제 무대를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의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자발적 이해와 공감, 지지를 얻기 위하여 열린 소통과정을 통해서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비전통적 외교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⁵

² 진행남,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방안: 한국의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JPI정책포럼, No. 2013-03 (제주평화연구원, 2013), p. 7.

³ 김기정,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과제, 2012.12); 진행남,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와 방안』, No. 2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2); 신중호, 『한국의 문화외교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지역별 차별화 방안』 (외교통상부, 연구용역과제, 2009); 마영삼,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 방향,” JPI정책포럼, No. 2011-27 (제주평화연구원, 2011);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JPI정책포럼, No. 2011-3 (제주평화연구원, 2011).

⁴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발견할 수 없지만,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에 관한 연구는 존재한다. 변창구,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콘텐츠와 전략,” 『통일전략』, 제12권 4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pp. 169~202; Kiejoon Pak, “China’s Cost-Benefit Analysis of a Unified Korea: South Korea’s Strategic Approache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6, Issue. 2 (Fall/Winter, 2012), pp. 25~55; 통일공공외교는 아니지만,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외교영역을 확대하려는 연구로는, 정기웅, “스포츠와 공공외교 수렴 가능성의 모색,” 『동서연구』, 제21권 제2호 (동서문제연구원, 2009), pp. 229~262; 김순태, “한국군의 군사외교 활동에 관한 연구: 공공외교의 관점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2권 제2호 (동서문제연구원, 2010), pp. 223~250.

⁵ 김태환,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와 통일공공외교의 분석틀,”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Ⅱ)』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50.



2. 연구 범위

본 연구는 국내의 통일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외교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는 한반도 통일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진 주변 4국이 한국의 통일 입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수립하려는 일환이다. 즉,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1차년도에 수행된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 4국의 對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실태연구에 이어, 본 연구는 2차년도에 해당하는 주변 4국에 대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가운데 중국에 관한 내용이다.

1, 2차년도의 연구는 병렬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이다. 일국의 외교가 상대적이라든가 측면에서, 외교의 대상국인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공공외교의 실태에 관한 1차년도의 분석은 우리의 통일공공외교 추진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한반도 통일문제를 이해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갖는 전문가 집단을 우선 선정, 활용해야 한다. 둘째, 타국과 다른 중국의 북핵 위협 및 북한문제 인식을 고려한 맞춤형의 전달 메시지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우리의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조정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을 고려해 우리의 對중국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체계와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우선 우리의 對중국 통일외교의 내용과 특성은 무엇인지, 이어 한국의 일반 공공외교 체계 속에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는 얼마나 체계적인지, 그리고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와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수행 현황은 어느 수준인지 등에 관한 집중적인 조사가 포함될 것이다.

본 연구가 공공외교의 새로운 영역을 발굴한다는 의미와 통일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통일공공외교의 내용은 한반도 통일문

제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통일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북정책 및 북핵문제, 탈북자, 북한인권, 대북지원 등 북한문제를 둘러싼 한·중 협력의 사안들을 모두 포괄하였다. 다만, 한반도 통일에 북핵문제가 갖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 통일관련 공공외교는 북핵문제 관련 사안에 집중해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공공외교가 탈냉전 이후 주목된 후 21세기 신공공외교로 이어지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21세기 이후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 공공외교의 현황 및 실태 파악 차원에서는 공공외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명박 정부 시기 이후가 중심이 될 것이나,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실태를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특성상 이명박 정부 시기와의 비교차원에서 소위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도 포함했다.

3. 연구 방법 및 구성

첫째, 본 연구는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시도인 바, 연구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 분석에 의존하였다. 공공외교에 관한 일반적 이론 검토 및 한국의 공공외교와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기존 연구를 활용하였다. 여기에는 단행본, 학술논문과 정책보고서 및 인터넷 자료 등 관련 주제에 관한 전반적인 조사도 포함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이는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조사하는 본 연구의 특성상, 정태적인 문헌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설문조사는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조사 차원에서 한국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한편, 추진 대상국인 중국의 인식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관련 중국인 전문가도 포함했다. 양국의 전문가는 각각 20명씩 총 40명을 선정하였는데,

I

II

III

선정 기준은 공공외교에 종사하거나 한·중관계 관련 전문가로서, 관료, 학자, 언론인, 기업인 등이다. 사용한 설문은 총 3개 부분,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부는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에 관한 설문이고, 2부는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전반적 실태를, 3부는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이다. 또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중국 현지를 방문한 심층면접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공개된 정보 및 자료 이외의 내용을 파악, 분석하는 데에 주력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학술적 연구를 통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학계의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통일외교와 공공외교의 접목을 시도하기 위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파악이란 점에서, 공공외교 관련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있는 언론 및 기업계 전문가의 견해도 반영하였다. 공동연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본 연구는 전체 연구진 워크숍과 중국팀 개별 워크숍을 각각 3회, 총 6회를 개최하였고 다수의 전문가 자문 및 간담회도 활용하였다.

본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 총 3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II장에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분석한 후, 결론부인 III장에서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한국의 한반도통일공공외교에 주는 시사점 및 과제를 제시했다. II장은 본 연구가 한국의 주변 4국 통일공공외교실태 연구의 일부에 해당하는바, 연구의 연속성과 함께 체계성을 동시에 고려해 구성하였다. 즉 전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5단계 분석틀(5-phase framework)’을 일용하였는데, 이는 공공외교의 실행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구성요소 즉, 외교 목표 설정, 주체, 자원 및 자산, 매체, 대상의 5단계 분석틀을 의미하며, 이에 의거해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의 수행체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자원 및 자산에 따른 공공외교의 영역인 지식외교, 문화외교, 한국학외교, 기업외교, 스포츠외교, 관광외교 중 통일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한국학외교,

기업외교, 스포츠외교, 관광외교를 제외하거나 타 영역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영역별 추진실태는 지식외교, 문화(한국학포함)외교, 미디어외교를 중심으로 점검하였다.

아울러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에 관한 경험적 파악을 보완하는 맥락에서 한국 및 중국 전문가의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설문도 앞에서 분석한 내용과 연계시켜 구성하였다. 즉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과 통일공공외교 및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체계 정비와 콘텐츠 개발 등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는 물론이고 한국 공공외교의 새로운 영역 발굴 및 한국형의 통일공공외교의 모델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한 연구결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1.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가.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의 환경과 시대

통일외교는 한반도 통일에 협력적인 지역 환경 그리고 국제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외교는 통일의 방식이 흡수통일이건 화해 협력을 통한 단계적 통일이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협력 혹은 묵인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의 방향이다.⁶ 요컨대 외교 교섭을 통해 통일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통일외교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사실상 한반도 통일에 있어 남북한 당사자 못지않은 중요한 변수이다. 중국은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가운데 남북한 모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서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 가장 많은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특히 북핵 위기 이후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유력한 영향력을 지닌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경우 한반도 통일 실현은 사실상 매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 지원하도록 하는 對중국 통일외교는 매우 중요하다.

현재 중국의 최대 국가 목표는 초강대국으로의 부상(浮上)을 이루어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바 ‘중화민족의 위대한 꿈(中國夢)’을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이 국가대전략으로 구상하고 있는 부상 일정은 2020년 ‘전면적 소강(小康)사회의 실현,’ 2050년 ‘중등 선진국가로의 성장’이라는 비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즉 창당 100년이 되는 2020년 무렵에는 국내총생산이 2000년의 네 배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50년 무렵에는 완전한 현대화를 달성하여 부강·민주·문명의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설정하고 있는

⁶ 박영호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KINU 연구총서 11-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48.

부상 일정이 진행되는 시점까지 중국은 주변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고 한반도통일 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이미 2010년대 10년을 부상을 위한 ‘전략적 절호의 시기(戰略機遇期)’로 설정하고 있다.⁷ 중국의 입장에서 이 시기는 부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도약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산적한 국내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중국의 부상 일정이 진행되는 향후 최소 10여 년간 중국은 자국과 인접한 한반도의 통일보다는 안정을 더 희망하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과정이 중국의 불안정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안보 불안과 국제적 입지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한반도 통일을 견제할 가능성도 있다. 즉 중국이 비록 공식적으로는 ‘남북 당사자 간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국이 주창하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북한 체제의 붕괴에 의한 한국 주도의 흡수 통일이나 전쟁에 의한 강제적 통일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은 가능한 한 한반도 통일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현상이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의 통일이 진행되는 것은 중국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은 자국의 부상 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통일을 포함하여 한반도에 급격한 현상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그렇다고 부상이 완료된 이후 초강대국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할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부상이 완료된 이후에 중국은 현재보다 강화

⁷ 이동률, “중국 비전 2020-초강대국화 전략의 과제,” 이동률 편,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pp. 11~15.

된 힘과 위상을 십분 활용하여 한반도 미래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발휘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비록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동시에 중국 역시 같은 분단국의 입장에서 타국의 통일과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도 어려운 입장에 있다. 따라서 중국이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부상 일정을 진행해야 하는 향후 10여년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환경을 하나의 대세로 형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회의 시기일 수 있다. 요컨대 중국의 부상이 완료되거나 부상과정에서 미·중 간 경쟁이 더 첨예해지기 이전에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對중국 통일외교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는 1992년 한·중 수교에서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수교는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외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북방외교는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통일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실상의 통일외교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수교 시 공동성명에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을 지지한다. 중국은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하여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확인받았다.⁸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후 줄곧 한반도 통일에 대해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의 부상과정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진행될수록 북한에 대한 전

⁸ 한·중 수교 공동성명 내용은 외교부, 『중국개황 2013』 (외교부 동북아2과, 2013), p. 361.

략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북한 껴안기’를 지속해오면서 한반도의 현상 유지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한·중 수교 직후인 1993년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한·중관계는 수교와 동시에 북핵문제가 지배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일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외교는 북핵문제 해결, 탈북자문제 등에 집중되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노골화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중 양국 간 협력은 더욱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008년 이후 중국의 가파른 부상, 그리고 이어진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재균형(rebalancing) 전략의 추진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에서 미·중 간 경쟁이 과열되는 국제정세와 맞물리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에게 있어 북한이 부담보다는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원론적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최근의 국제정세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논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나.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의 내용 및 특징

한·중관계는 지난 21년 동안 외형상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즉 한·중 양국관계는 1992년 수교, 이어진 1994년 리펑(李鵬) 총리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우호협력관계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통해 ‘21세기 협력적 동반자관계(面向21世紀合作伙伴關係)’로 발전을 공식선언하였다. 2003년 7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한·중 양국의 교류와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全面合作伙伴關係)’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5월 중국을 방문하여 한·중 양국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로 격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아래 표에서 보여주듯이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본적으로 항상 남북한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에 대한 원칙적 지지를 표명해왔다.

〈표 II-1〉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의 한반도 통일관련 합의 내용

정상회담	중국 측의 통일관련 성명 내용
수교 성명 (1992.8)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노태우-양상쿤 (1992.9)	남북한 쌍방이 한반도의 자주평화통일을 조속히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
김대중-장쩌민 (1998.11)	한반도 남북 양측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
노무현-후진타오 (2005.11)	남북한 양측의 관계가 개선되어 최종적으로는 평화통일이 실현되기를 계속 확고 불변하게 지지한다는 점을 재천명하였다.
이명박-후진타오 (2008.5)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박근혜-시진핑 (2013.5)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신뢰에 기반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염원인 한반도의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중 양국이 대북한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수렴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한·중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제로섬(zero-sum)적 특성도 상당 정도 완화 추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면서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포기, 그리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정책기조인 북한의 체제유지, 남북 당사자 간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 및 평화 지향과는 원론적인 일치를 보였다.⁹

그러나 이 시기조차 이러한 원론적인 정책 방향의 일치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관한 한 갈등을 내재하고 있었다. 즉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통일을 포함한 한반도의 현상변화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전개했던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려 한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북한에 대한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설정하는 ‘비핵개방 3000’ 정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정책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정책변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의 주변 정세를 불안케 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중국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 그리고 한국 주도의 흡수 통일로 이어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이른바 ‘작전계획 5029’를 통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공조를 목격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붕괴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다.¹⁰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체제의 불안은 중국의 안정적 부상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특히 중국은 북한체

⁹ 이동률, “수교 이후 한·중 정치관계의 회고와 전망: 중국 외교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26권 3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2), pp. 57~58.

¹⁰ 이동률, “북한문제와 한·미·중 협력,” 이태환 편, 『한반도 평화와 한·미·중 협력』, 세종정책총서 2010-2 (서울: 한울, 2010), pp. 62~66.

제의 변화가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경계하게 되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미국과의 공조 하에 흡수통일 의지가 있는 것으로 중국은 파악하면서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되었으며,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중 양국 간 불신과 경계심이 고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의도는 2차 핵실험 이후 2009년 10월 이루어진 원자바오 총리의 북한 방문에서부터 그 모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이 중립적이고 원칙론적인 입장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도발한 북한을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으며 양국 간 전략적 불신이 심화되어 갔다.

중국은 2009년 이후 북한문제가 중국의 안보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해 갔다. 즉 북한의 경제난, 김정일 건강악화, 화폐개혁 이후의 혼란 등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의 대북 압박, 남북한 관계 악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북한 체제위기에 대한 우려는 깊어지고 있었으며 동시에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중단기적으로 북한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북한 껴안기’라는 전략적 선택을 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북한으로 인한 부담은 줄이고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시켜가기 위해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의 북한 이전을 통한 친중국 북한 체제의 연착륙을 모색하고 있다.¹¹

¹¹ Dong Ryul Lee,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2 (KIDA, June 2010), pp. 170~173.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6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원론적 차원에서 공조 의지를 확인했다. 즉 양국 정상은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표 II-1>과 같이 기존의 정상회담과 유사한 합의를 이루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측이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중국 측이 건설적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라는 내용을 명시하여 북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중국 측도 이해하고 수용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변화가 있었다.

중국이 비록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수인 중국을 대상으로 직접 통일의 교를 전개할 수 있는 환경과 입지는 오히려 악화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즉 한국 주도의 통일과정에서 북한체제의 붕괴가 진행되면서 중국의 국경지역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체제, 주한미군을 유지할 경우 중국은 사실상 미국과 국경을 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한·중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불신을 야기하는 이슈이기도 하다. 결국은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하는 것이 對중국 통일외교의 핵심이고 이는 결국 한·중 간의 전략적 신뢰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한·중 양국관계는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전략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화와 소통을 시도하였다. 실제로 한·중 양

국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정상 간의 빈번한 만남이 진행되었다. 수교이후 2012년 상반기까지 양국 정상(중국 측 총리 포함) 간 회동은 총 59회가 이루어졌으며 양국 외교부 차관급 전략대화가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2013년 6차에 이르고 있다.¹²

군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2011년 7월 개최되어 군사교육의 협력강화, 국방전략대화 제도화 등에 합의하고 처음으로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방전략대화는 2011, 2012년에 개최되었으며 특히 2차 국방전략대화(2012년 베이징)에서는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해·공군에 개설된 핫라인(Hot Line)을 국방부차원으로 격상하고, 군사교육 교류 확대, 재난구호 및 해적퇴치 활동, 평화유지활동(Peace Keeping Operation: PKO), 인도적 지원 등에 합의함으로써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¹³

이처럼 한·중 양국이 전략적 관계로 격상한 이후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전략적 협력관계가 설정하고 있는 기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중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격상된 이후 오히려 북한문제와 한미동맹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중국은 한미동맹 강화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제기하였고, 한국은 북핵 및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중적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¹⁴ 즉 양국이 한미동맹, 북핵문제 등 중요한 전략적 이슈를 둘러싸고 갈등하면서 신뢰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¹² 전병곤 외, 『한·중·일 간 외교안보협력관계 비교 분석과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 사회 협동연구총서 12-02-04,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2), p. 27.

¹³ 이창형, “전략적 협력동반자 시대의 한·중 군사관계 발전 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420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년 7월 23일), pp. 1~8.

¹⁴ 전성홍,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중관계의 실질적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對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1-03-23,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p. 30.

2008년 이후 양국 간 고위급 전략대화과 국방장관 회담 등이 개최되었지만 이 또한 위기 예방이나 관리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를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예정된 국방장관 회담이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오히려 연기되는 등 대화 채널이 위기 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밖에도 2012년의 탈북자 북송 사건과 김영환 고문 사건 등이 발생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사전에 예방되거나 사후에라도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해결 되지 못함으로써 한·중 간 위기 예방과 관리를 위한 협력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과의 동맹 강화,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등 도발, 남북관계의 경색, 중국의 상대적 부상에 따른 공세적 외교의 전개,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귀환,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경쟁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중관계 역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요컨대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는 중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북·중관계의 특수성, 미·중관계의 복합적 특성 등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커지고 있어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고려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결과가 중국의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對중국 통일외교가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한·중 양국관계에서 기본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중 수교이후 21년간 양국관계는 비록 외형적으로는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추진에 있어 사실상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양국 간의 기본적인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통일과 같은 한반도 현상 변경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한·중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한·중 양국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되고 이로

인해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한·중 양국 관계 자체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중 간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은 비례하여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의 부상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국은 가능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정세의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있어 한반도 통일과 같은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간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력을 얻어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셋째, 다른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 일단 중국 역시 분단국이기 때문에 타국의 통일 노력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거나 특히 반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1991년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으로 인해 양안 관계와 남북한 관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중국과 달리 남북한은 이미 서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분단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논리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반도 통일에 대한 범민족적 의지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통일이 당위의 문제이고 대세라는 국내외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켜갈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할 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즉 한반도 통일을 위한 對중국 외교는 한반도 통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중국의 협력을 모색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이 반대할 수 없도록, 또는 묵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을 한국이 조성해 갈 필요가 있다.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는 이상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에 대해 통일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이전에 국내의 통일 의지 강화, 남북관계 개선, 한·중관계의 신뢰 회복 등 일련의 정지 작업이 선행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통일이 분명한 하나의 추세로 등장할 경우, 한·중 양국 간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절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즉 우선 통일과정이 가능한 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고, 그리고 통일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이 되거나 적대적인 세력의 배타적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를 형성하려는 양측의 노력이 전제된다면 이 또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중국 내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남한주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결국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실현 가능성을 가상해서 통일 후 한국과의 관계설정과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고려한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지 않다는 논의도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¹⁵

¹⁵ 중국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첫째, 중국과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에 유리하고, 둘째, 주한미군의 철군 논의가 진행되는 등 중국과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국제관계의 재편이 촉진될 것이며, 셋째, 양안 통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기대도 담고 있다. 李敦球, “冷戰後中韓關係的發展與東北亞格局—中韓建交15年來雙邊關係的回顧與展望,” 『當代韓國』, 2期 (2007), p. 6; 張琏瑰, “朝鮮半島的統一與中國,” 『當代亞太』, 第5期 (2004), pp. 35~36.

2.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가. 對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인식

(1) 중국 국민의 對한국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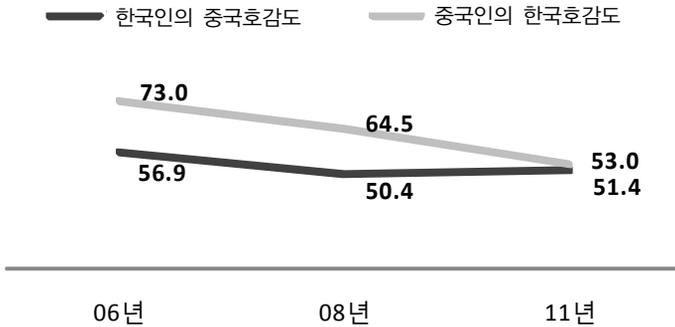
한·중관계가 수교 이후 지난 20여 년간 기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한·중관계에서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양국관계 발전을 주도하며 양국 간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불러오면서 양국관계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 수교 초기 한때 한국은 중국인들에게 배워야 하는 경제성장의 모델 국가로 회자된 바 있다. 중국에서 한류(韓流)가 전성기를 누릴 때는 중국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적도 있다. 그런데 수교 20년이 경과하면서 이러한 양국관계의 양적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도 양국 국민 간 인식과 정서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양국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의 악화로 인해 오히려 양국 간에 진행되고 있는 왕성한 교류와 접촉이 갈등과 충돌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한·중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인식의 악화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2011년 동아시아연구원과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가 공동 실시한 양국 국민 인식조사는 아래 <그림 II-1> 과 같이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2006년 정점에서 점차 낮아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6년에는 73.0점으로 주변국들에 비해 월등히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8년에는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64.5점으로 낮아졌고, 2010년에는 다시 57.5점으로 하락하여 북한에 대한 호감도(55.5점)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다.¹⁶

¹⁶ 이동률 외,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對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3-34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pp. 34~37.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실시한 또 다른 여론조사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중관계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09년과 비교하여 2010년에는 11.4% 하락한 반면, 부정적 평가는 오히려 1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⁷

(그림 II-1) 한·중 국민 간 상대국 호감도 변화추이(평균점수)



출처: EAI-ARI 공동 “2011 한·중 국민인식 조사” 기초분석 (비공개 자료).

그리고 중국인들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 못지않게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현상은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비교되면서 더욱 두드러져 보이고 있다.¹⁸ 즉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고 중국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가파르게 부상하면서 한·중관계에서 힘의 비대칭마저 확대되면서 한·중 간에 상호 이해

¹⁷ 동북아역사재단, 『2010년 한·중·일 역사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10), p. 8. <<http://www.historyfoundation.or.kr/shtml/include/filedownload.asp?sid=422&fname=%ED%95%9C%EC%A4%91%EC%9D%BC+%EC%97%AD%EC%82%AC%EC%9D%B8%EC%8B%9D+%EC%A1%B0%EC%82%AC+%EA%B2%B0%EA%B3%BC%EB%B3%B4%EA%B3%A0%EC%84%9C%280%29%2Ehwp>>.

¹⁸ 王曉玲, “中韓民衆間的相互認識以及好感度影響因素,” 『동아연구』, 제63권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2), pp. 92~93.

필요성에 대한 동기에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불균형에 힘의 비대칭성마저 추가되면서 중국에 한국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공공외교가 얼마나 긴요하고도 어려운 일인지를 가늠케 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조사 결과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며 공공연히 민족주의가 고양되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의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예컨대 2010년 8월 중국 10대 도시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국인 49.2%가 한국에 대한 대표적인 이미지로 민족주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²⁰ 중국 학자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인 조사 대상 중 78.3%가 한국인 하면 가장 먼저 ‘민족 자존심’을 연상하고 있다.²¹

2009년 여론조사에서도 “한국 국민이 한·중 간 역사 쟁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인들은 “한·중 역사 쟁점에 대해 한국 중심으로 사고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29.3%를 차지했다. 그 외에도 ‘한국인의 배타적인 성격’(18.0%), ‘한국인의 중국 역사에 대한 편견’(13.2%), ‘한국 역사교육의 잘못’(12.6%) 순으로 응답했다.²²

중국인들이 한국인은 민족적 자존심이 매우 강하다고 일치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우선 현상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양국 사이에 전개된 소위

¹⁹ 趙立新, “敏感、戒備和對抗－20世紀90年代以來中韓學者民族主義研究的相互審視,” 『국제지역학논총』, 제3권 1호 (국제지역학회, 2010), pp. 31~50; 王生, “試析當代韓國民族主義,” 『現代國際關係』, 2期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 2010), pp. 36~39; 李建明, “韓國民族主義及其影響下的中韓關係,” 『學理論』, 18期 (哈爾濱市社會科學院, 2008), pp. 45~46.

²⁰ 이동률 외,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pp. 23~25.

²¹ 王曉玲, “中韓民衆間的相互認識以及好感度影響因素,” pp. 96~98.

²² 동북아역사재단, 『2010년 한·중·일 역사인식 조사 결과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10), p. 48

‘전통과 문화 소유권’ 논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한국이 2005년 강릉단오제를 유네스코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 등재 신청을 하여 선정되자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의 전통문화를 강탈하고 있다.”고 격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중국이 중추절, 청명절, 단오절을 연이어 국가 공휴일로 새로 지정하고, 한의학, 한자, 아리랑 등으로까지 소유권 논쟁이 비화되었다.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감성적인 측면이 강하고 그 배경에는 결국 중국의 부상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인들이 부상으로 인해 자아의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중화민족주의가 고취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들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내재된 것이다.

실제로 2011년 8월 중국 10대 도시에 거주하는 일반인들과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중국의 일반 도시인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자부심, 열망, 그리고 기대가 예상보다 상당히 고조되고 있었다. 예컨대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점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하는 질문에 44.7%가 ‘매우 자랑스럽다,’ 40.2%가 ‘자랑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하였다.²³

이 조사 결과는 같은 시기 한국인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매우 자랑스럽다’에서 두 배 가량 높은 수치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중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91%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부상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이 56.9%(‘매우 그렇다’ 17.8%+‘대체로 그렇다’ 41.8%)에 달하고 있다.²⁴

²³ 『중앙일보』, 2011년 9월 27일.

²⁴ 『중앙일보』, 2011년 9월 27일.

이러한 중국인들의 불만이 한·중관계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요인 중의 하나로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이 보여 준 중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꼽고 있다. 중국의 여론주도층은 이를 對한국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중국을 무시하는 우월주의적 태도가 중국의 민족주의와 배타적 반응을 유발하면서 결과적으로 對한국 이미지가 악화된다는 논리이다.²⁵

실제로 중국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존중하는가 하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7.7%, 그리고 ‘동의하는 편이다.’ 57.8%를 합해 68.5%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여론주도층에서는 일반인들의 절반 정도인 33.3%(전적으로 동의 4.0%, 동의하는 편 29.3%)만 한국인이 중국을 존중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²⁶

그리고 한국이 미국에 편향되어 있는 것이 중국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요한 정치·안보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⁷ 중국의 일반국민, 여론주도층 공히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과 가깝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림 II-2>에서 보여주듯이 여론주도층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깝다’고 대답한 응답이 81.3%,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63.6%로 나타났고,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깝다’고 대답한 응답이 여론주도층에서는 9.3%, 일반 국민 조사에서 20.8%로 나타나고 있다.²⁸

²⁵ 이동률, “중국민족주의 고조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 『중소연구』, 35권 4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1/2012), pp. 68~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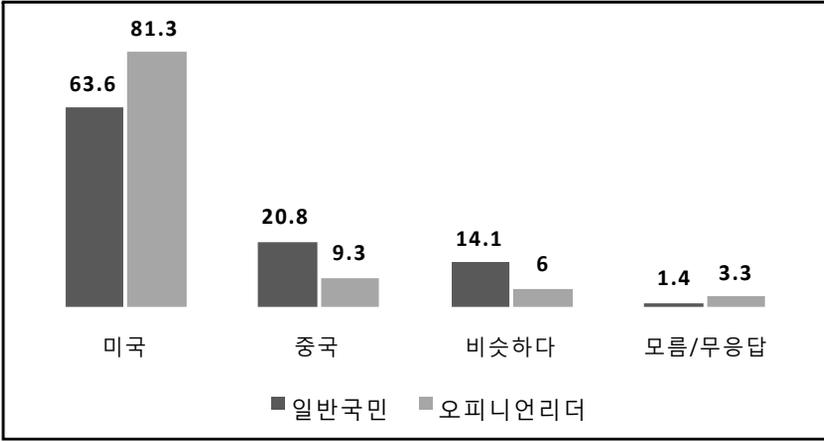
²⁶ 이동률 외,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pp. 59~61.

²⁷ 이동률, “중국민족주의 고조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 pp. 68~70.

²⁸ 이동률 외,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pp. 63~65.

(그림 II-2) 중국의 한국 우선순위 평가: 친미 대 친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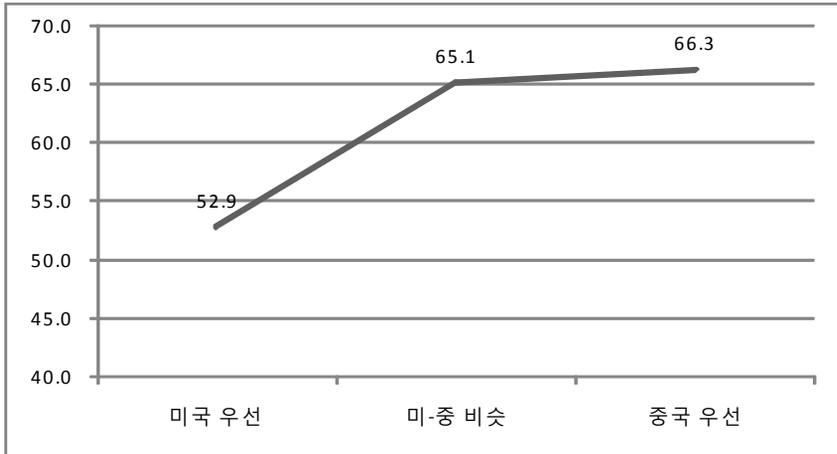
(단위: %)



출처: 이동률 외,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對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3-34 (2010), p. 64.

<그림 II-3>은 한국이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가깝다고 응답한 중국인일 수록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깝다고 보는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52.9점에 불과했지만, 비슷하다거나, 미국보다 중국에 더 가깝다고 대답한 사람들에서는 각각 65.1점, 66.3점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호감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II-3〉 중국의 한국외교 우선순위 인식별 호감도 차이(점)



출처: 이동률 외,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對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3-34 (2010), p. 65.

중국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중국인들은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리더가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중국을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미국 편향적인 것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⁹

한·중 양국은 일반적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래서 굳이 새롭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일종의 ‘이웃 증후군’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는 깊지 않으며 갈수록 이해하려는 동기도 약화되고 있다. 이해가 부족하면 왜곡과 오해가 기승을 부리게 되고 편견으로 자리 잡게 된다. 요컨대 중국에게 한국을 제대로 이해시키는 공공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인식하게 하고 있다.

²⁹ 중국인은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리더가 될 것으로 믿는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24.4%가 ‘확신한다’고 답했고, 36.3%는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즉 중국인 60.7%가 중국의 굴기(崛起)를 낙관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일보』, 2011년 9월 27일.

(2) 중국 국민의 통일관련 對한국 인식

중국인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지는 않다. 2011년 중국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반도 통일을 ‘적극 지지한다’는 응답이 18.0%, ‘지지하는 편’이라는 응답이 18.7%로 전체 응답자의 36.7%가 지지 의견을 표시했다. 한반도 통일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적극 반대 6.0%를 포함하여 10.9%에 불과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지지도 반대도 않는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0.5%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³⁰

중국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국의 통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10.9%에 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지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인들의 입장에서 공식적,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반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통일을 지지할 의사도 없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인들이 한반도 통일에 호의적인 입장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인들의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내심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조사 결과도 있다. 북한 체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55.9%(‘매우 긍정적이다’ 21.4%+ ‘약간 긍정적이다’ 34.5%)였다.³¹ 반면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모두 8.9%(‘매우 부정적이다’ 3.8%+ ‘약간 부정적이다’ 5.1%)에 불과했다.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 않다는 경우는 33.5%였다.

중국 역시 분단국가로서 대만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내정불간섭원칙’을 견지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 결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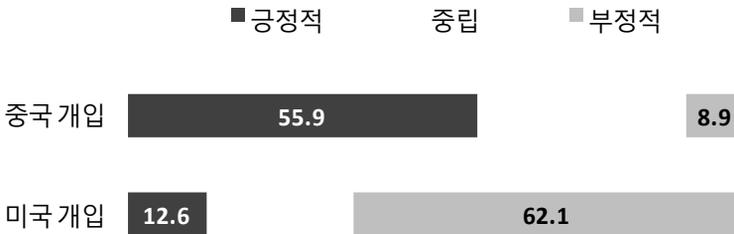
³⁰ 신경진, “뜨거운 한-중 간 역사,문화 논쟁, 차갑게 바로보기,” 정재호 편, 『중국을 고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pp. 46~53.

³¹ EAI-ARI 공동 “2011 한-중 국민인식 조사,” 2011(비공개 자료).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북한발 안보불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미국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모두 12.6%(‘매우 긍정적이다’ 3.5%+‘약간 긍정적이다’ 9.1%)이었으나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모두 62.1%(‘매우 부정적이다’ 33.5%+‘약간 부정적이다’ 28.6%)이었다.

〈그림 II-4〉 중국인들의 북한 급변 시 마중 개입 긍정·부정 인식

(단위: %)



- 모름/무응답 제외
출처: EAI-ARI 공동 “2011 한·중 국민인식 조사” (비공개 자료).

나아가 남북한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경우 중국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한국을 지지해야 한다(2.0%)’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에 오히려 ‘북한을 지지해야 한다(29.4%)’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았으며 나머지 다수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응답했다.

(3) 중국 국민의 한·중 협력 인식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외교 안보 분야에 비해 경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는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대중문화 교류가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I

II

III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한국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경로가 대부분 한국 상품이나 문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조사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한 중국인들은 대체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한국 경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한국 상품은 ‘예쁘다’(79.1%), ‘세련되다’(66.8%)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³²

요컨대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는 역시 한국 제품과 한국 문화에 대한 접촉빈도를 꼽을 수 있다. 한국 제품이나 문화를 경험한 비율이 여론주도층에서는 압도적 다수였는데 ‘한국제품을 구입해보았다’는 응답이 93.3%, ‘대중문화를 접촉해봤다’는 응답도 94.7%나 되었다. 일반국민들의 경우 TV/영화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한 비율은 90%에 육박했지만, 한국 제품을 직접 경험한 비율은 65.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는 상당히 중국의 일상문화 속으로 상당히 잘 침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인들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서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을 하나의 중요한 성장모델로 인식해왔으나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노정되면서 약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성장방식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시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다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화 경험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도시화 과정의 기법을 전수받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어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과정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³² 王曉玲, “中韓民衆間的相互認識以及好感度影響因素,” pp. 95~99.

나.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체계

(1) 목표

중국에 대한 통일외교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과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외교는 통일의 방식이 흡수 통일이건 화해 협력을 통한 단계적 통일이건 중국의 협력 혹은 묵인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의 방향이다. 그리고 공공외교가 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얻는 것이라면, 중국에 대한 통일공공외교는 결국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부 또는 비정부 행위자들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³³ 그런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히려 현재와 같이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되고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는 주변 강대국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 통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공공외교의 최대 목표는 중국 내 ‘통일 부담론’을 약화시키고 ‘통일편익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보다는 손실과 부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 내에 자리 잡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러한 우려와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에 장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목표이다.

우선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이 무엇 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러한 중국의 우려와 경계를 해소하려는 노력

³³ 김규륜 외,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공공외교 분석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2-0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p. 7.

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대량 난민 발생과 같은 혼란, 심지어는 무력 분쟁 등으로 인해 중국의 동북 국경에 불안정이 야기되고, 나아가 중국의 부상 일정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은 동북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과 급변사태의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 또는 불식시키기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 역시 중국 이상으로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지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지 않는 한 어느 경우에도 무력 사용 등 강제적 방식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을 강행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중국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게 하는 상황과 여건을 최소화하고 부담으로 여기게 되는 조건과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은 북한체제의 불안정과 위기가 고조될 경우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북한 체제의 돌연한 위기가 기회가 아니라 도전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대북한 공진화 전략 추진은 우선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은 통일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역학 관계의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이거나 또는 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 하에 존재하여 사실상 중국이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통일을 지지한다’는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사실상 통일한국이

최소한 중립적인 국가여야 한다는 점을 항상 주장해 오고 있다.

한국 역시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통일은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남북 당사자 간 해결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통일과정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 실현된다고 해도 통일한국의 위상 역시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역시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 사이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중국을 포함하여 국제 사회에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중국을 견인, 또는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비춰서는 안 된다. 이러한 시도는 장기적으로는 미·중 간 세력 경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는 부상하는 중국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채 견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중국은 한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한·중 양국 사이에 신뢰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 즉 한국은 중국의 경계와 견제 대상으로 고착화되어 한·중관계는 만성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강화되고,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협력하기보다는 반대하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커진다.³⁴ 요컨대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거나 강제적 방식을 통한 통일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아울러 통일한국이 결코 중국에 적대적인 입장에 서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국민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부상에 상당히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예컨대 첫째,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³⁴ 이동률, “중국의 초강대국화와 한반도의 미래,” 이동률 편,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p. 282.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의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그 성장의 영향이 중국의 성장에도 주요한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되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되고 이는 결국 미·중 간의 경쟁과 긴장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중국이 발전에 집중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은 중국의 인접국가로서 결코 중국에 적대적 세력이 되기보다는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국가가 될 것이다. 넷째, 탈북자 문제 등 북한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중국의 전략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됨으로써 중국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동북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중국의 균형발전과 국가 통합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 통일과정에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에서 책임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는 점 등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2) 주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공공외교의 추진 주체는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통일공공외교의 추진 주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국가기관(트랙1), 국책연구소(1.5트랙), 그리고 민간(트랙2)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국가기관에는 대통령, 주중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부, 통일부, 그리고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주체들이다. 국회 역시 당 차원, 또는 의원외교의 형식을 통해 중국의 전국인대와 전국정협 지도부인사들을 대상으로 교류를 진행하고 있어 간접적인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다. 둘째, 반관반민 차원의 1.5트랙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 대화와 국책연구소가 중심이 되고 있다. 통일외교안보 관련 주요 국책연구

소는 통일연구원을 비롯하여 국립외교원,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이 있다. 그리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중미래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중국에 있는 한국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대통령 직속 동북아시아위원회가 중국과의 전략대화를 진행하면서 북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양국정상의 합의하에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를 설립하여 양국 간 전략대화를 지속시켜 갔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6월 정상회담에서 한·중 공공외교포럼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여 현재 구성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대학과 학술단체, 기업, 언론이 주체가 되고 있다. 대학에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그리고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도 있다. 예컨대 한중친선협회, 한중문화협회, 한중우호협회 등이 다양한 교류활동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통일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언론의 경우에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문판 인터넷 기사를 발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는 국내 언론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연구소를 설립하여 학계, 민간 교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對중국 공공외교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2〉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주체

영역	주 체	
트랙(정부)	정부	통일부, 외교부(주중한국대사관), 민주평통
	국회	한·중의원외교협의회, 의원외교
1.5트랙 (국책연구소)	공공기관	동북아시아위원회, 국제교류재단(한중미래포럼, 한중공공외교포럼), 한중전문가공동연구위원회 등
	미디어	국제방송 (아리랑TV, KBS World 등)

I

II

III

영역	주 체	
트랙2 (학계, 민간단체)	학계, 연구소	북한대학원대학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 등
	기업	SK 한국고등교육재단
	민간 교류단체	21세기 한중교류협회, 한중친선협회, 한중문화협회, 한중우호협회, 한중교류협회 등
	개인	한국민, 재외동포

한·중 양국 간에는 수교 이후 지난 20년간 각 주체별로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해 왔다. 그러나 이들 주체 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작동되고 있지는 못하다. 예컨대 외교부의 사례를 보면 외교부 내의 각 부처 간에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협조와 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제나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평상시 업무협조 역시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그간 정부 또는 기관장의 교체에 따라 정책 방향에 변화가 발생했고, 추진주체의 인적 구성에도 변동이 생기면서 기존의 인적 연계가 단절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 내 각 부처 간 긴밀하고 체계적인 협조 체제가 작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처별 내부 경쟁이 작동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단체장 개인의 역량과 인적 연계망을 활용해 활동을 해오고 있어 활동 영역이 제한적이고, 단체 간 협력과 조율이 진행되기보다는 중국 내의 동일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중복 교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각 연구기관 간에도 對중국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자원 및 자산

한국이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자산은 영역별로 문화예술자산, 경제자산, 지식자산, 인적자산, 스포츠 자산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을 대상으로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는데 효율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문화예술, 경제, 그리고 지식자산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중국 일반인들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인들이 한국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경로가 대부분 한국 상품과 한국의 드라마, 대중음악 등 문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한 중국인들은 대체로 한국에 대해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갖게 하는 이들 자산을 중요한 매개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입장을 갖도록 유도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영역은 지식외교 영역이다. 이러한 경향은 아무래도 통일공공외교의 특성상 정부주도로 진행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전략대화, 학술대회 지원 등이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대로 한·중관계가 수교와 함께 북핵문제가 가장 중요한 첨예한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고 인식 차를 줄이기 위해 15트랙 또는 민간 전문가들 간의 논의가 중심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즉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인식하고,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실제 공연이나 전시활동 등 문화를 매개로 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활동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대상도 중국 대중이 아닌 현지의 한국 교민을 상대로 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상품과 한국의 경제발전 노하우 등이 중국인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주요한 자산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일공공외교에 활용하는 방안이 뚜렷치 않아 실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이와 관련 2013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제안에 따라 한·중 ‘인문유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문화자산을 통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중요한 진전이라 할 수 있다.

(4) 매체

중국에 대한 공공외교의 매체는 언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 전략대화 및 학술회의 등 회의체, 그리고 문화외교의 주요한 수단인 방송, 공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중국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언론, SNS, 그리고 방송 등이 통일공공외교의 주요한 매체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3대 신문사가 주요 기사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중국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이들 기사내용에 대한 중국 네티즌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이들 언론보도가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로서의 주요한 매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의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향후에도 이들 매체의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부가 2012년부터 중국 초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한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내 최대 인터넷 업체인 텡신망(騰訊網, www.QQ.com), 웨이보(微博, www.weibo.com, 중국판 트위터)와 웨이신(微信, www.WeChat.com, 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운영함으로써 중국에 한국의 매력을 홍보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국민들과 중국 지도부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를 활용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활동은 신중하고 용의주도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디어 공간에서 양국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공공외교포럼 출범에 합의함으로써 중국을 상대로 다양한 문화 공연과 행사를 통한 한국의 문화외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한·중 간에는 역사, 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를 매개로 하는 관계발전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니고 있다. 다만 2005년 강릉단오제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가 양국 간 비이성적인 전통문화 소유권 논쟁으로 비화된 사례를 고려하여 문화를 매개로 하는 공공외교가 자칫 양국 간 민족 정서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³⁵

한편 중국 내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외교의 주된 매체는 다양한 유형의 대화와 회의체이다. 이들 매체는 특정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적 주제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공공외교로의 저변확대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 북핵문제, 북한체제의 미래 등 통일과 관련된 지식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클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여전히 한반도 통일문제와 같은 중국의 국가이익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안에 있어서는 일반인들보다는 이들 전문가 집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공공외교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회의체라는 매체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³⁵ 신경진, “뜨거운 한·중 간 역사, 문화 논쟁, 차갑게 바로보기,” 정재호 편, 『중국을 고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pp. 46~53.

(5) 대상

중국에 대한 통일공공외교는 정부, 관변단체, 학자,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가 주로 지식외교에 집중되고 있어 그 대상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여론 주도층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의 결과 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공산당 일당체제의 권위주의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북핵문제, 한반도 통일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 다른 사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중국에 대한 통일공공외교의 대상을 고려할 때 중국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반영되고 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13억 인구의 거대국가이면서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로서 복잡하고 다양성이 큰 국가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공산당 일당체제의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사회, 경제적으로는 지난 30년의 개혁·개방의 과정을 통해 급속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기본적으로 지역 간 문화, 사회 및 경제 환경의 편차가 큰 거대국가이면서 지난 30년의 개혁·개방과정을 통해 지역 간 편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중국 내의 지역적 편차와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공공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중국 내 한국과 교류가 활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중서부 내륙지역 간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격차는 클 수밖에 없다. 아울러 북한과 인접한 동북3성지역의 국민들과 다른 지역 국민들 사이에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인식에 있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공공외교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층별 맞춤형 접근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 여론 주도층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본 이해와 영향력에서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국 상품과 문화에 친숙한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문화와 상품 기반의 공공외교가 필요한 반면에 정책 결정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여론 주도층에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다양한 대화채널과 네트워킹을 통한 공공외교가 전개될 필요가 있다.

다.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실태

중국 정치권력의 분산화가 심화되고 중국의 국제체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중국공산당 중앙이 중국의 대외정책을 독점하는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부와 국유기업 그리고 지방정부를 비롯한 다양한 이익단체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³⁶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중국 내 기업들이 있고,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실시한 후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동북지역의 중국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북한과 동맹관계를 지속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심지어 중국 정부가

³⁶ Joseph Fewsmith and Stanley Rosen, "The Domestic Context of Chinese Foreign Policy: Does Public Opinion Matter?," David M.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pp. 151~187; 齊建華, 『影響中國外交決策的五大因素』(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10), pp. 218~260; 王存剛, "當今中國的外交政策: 誰在制定? 誰在影響?," 『外交評論』, 2012年 第2期(外交學院, 2012.3), pp. 1~18.

북한보다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기를 바라며, 북한과 동맹조약을 수정·폐기하기를 희망하며,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³⁷

특히 2012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도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시위가 발생하였고,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는 여론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내 여론 변화는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의 지도부로 하여금 대북정책을 조정하도록 견인하는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중국에 대해 통일공공외교를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전개할 경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기존 입장과 정책에도 근본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이다.

2003년 북한의 3자회담 참여 결정, 2013년 5월 최룡해 북한 특사 방중 시 6자회담 참여 의사 표명 등을 통해서 볼 때, 중국은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및 통일에 대해서 큰 관심과 이해를 가진 강대국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과 민간단체 및 반관반민 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를 경제와 스포츠 분야를 제외한 지식외교, 문화외교, 그리고 미디어외교 영역으로 구분하여 추진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적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국내 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중국 국민들을 상대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변화 유도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가 어렵고,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노력도 현실적으로 가능하

³⁷ Deng Yu Wen, "China Should Abandon North Korea," *The Financial Times* (February 28, 2013).

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외교, 문화외교, 미디어외교 등 3개 영역에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가 정부 차원(트랙1), 1.5트랙 차원 그리고 민간 차원(트랙2)에서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정권별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도 논의할 것이다.

(1) 지식외교 추진실태

한국은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인식하고, 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반관반민 차원 및 민간 차원에서도 북한의 정책변화 유도와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통일공공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북한문제 및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對중국 외교는 그동안 전통외교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중국외교 결정과정이 다원화 추세를 보이고 한·중 간 교류가 급속도로 증대됨에 따라 공공외교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 통일공공외교는 아직 초보적이고 비체계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가) 정부 차원

1) 대통령

중국 대중을 상대로 한 한국의 대표적인 통일공공외교 활동은 대통령 방중 시 베이징대학(北京大學)과 칭화대학(淸華大學)에서 중국 대학생과 교수들을 상대로 한 연설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베이징대학에서 중국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남북한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중국인들의 협조와 지지를 당부했다. 이는 한국 대통령 신분으로서 중국인을 상대로 한 최초의 연설로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당시 중국 국민들도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I

II

III

햇볕정책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대중에게 직접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을 밝힘으로써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졸업한 칭화대학을 찾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동북아에서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협력과 단결의 질서를 구축하여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대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중국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만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³⁸ 미국 부시 행정부 시기 반테러 정책 명분하에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등 일방주의의 외교 정책을 전개하여 미국이 중국과 마찰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무력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 방식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 대한 중국인들의 호감과 지지를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대학에서 대북 상생공영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시대에 걸맞게 한·중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주제로 중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한 연설은 중국 중앙 TV방송과 주요 신문을 통해서도 중국인들에게 보도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우호적 인식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국민 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³⁸ 중국 칭화대학 대통령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중국 현지 대학생들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사전에 조사하고,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구상에 대한 설문조사도 시행했음. 노무현 대통령 칭화대학 증문 연설문은 “盧武鉉總統在清華大學的演講,” 2003.7.9.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 직후인 2013년 6월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리커창(李克強)과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와 회견하여 한·중 지도부 간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같은 전통외교 활동 이외에 칭화대학교에서 중국의 대학생들과 교수들을 상대로 “새로운 20년을 여는 한·중 신뢰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연설 시작 부분을 중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중국인들에게 호감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³⁹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중국의 번영을 위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국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호소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중국 대중을 상대로 한 가장 비중 있는 통일공공외교로 평가된다. 특히 중국의 대북 및 한반도 통일 정책은 중국공산당 중앙에서 결정되는 바, 대통령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행하는 공공외교 활동이 가장 비중 있고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 통일부

북한문제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핵심 정부부처인 통일부도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중국을 상대로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통일부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는 한·중 수교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중 수교가 내부적으로 확정단계에 들어갔을 당시인 1992년 7월 통일부는 정부부처 내 중국 담당 실무자와 통일연구원(당시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진 등으로 구성된 중국 시찰단을 텐진과 베이징을 거쳐 중국 동북지역에 파견했다. 통일부 중국 시찰단은 중국 동북지역의 조선족 오포피언 리더들과 접촉하고 이들에게 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³⁹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 이후 환구시보가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 대통령의 중국어 연설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증진시키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중국인이 87%에 달했다. 『環球時報』, 2013년 7월 1일.

한·중 수교시대에 대비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정에 중국 내 조선족의 긍정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한 중국시찰로 평가된다.

통일부가 중국을 상대로 전개한 통일공공외교 노력 중의 하나는 중국과 북한 간 교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 동북지역에 통일부 관료와 통일연구원 연구진을 파견한 것을 들 수 있다. 1995년 선양사회과학원에 2명의 중국 및 남북한관계 전문가를 파견하여 중국의 학자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방침을 중국 내 학자들에게 알리고 중국학자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통일공공외교로 볼 수 있다.

또한 통일부는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주중 한국대사관에 통일주재관을 파견하여 상주시켜 왔으며, 중국 내의 다양한 북한문제와 통일문제 전문가와 접촉하도록 하여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에 대한 정책구상을 중국 전문가들에 설명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여론변화 동향을 파악하여 본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주중국 통일주재관을 역임한 통일부 직원들로 문대근, 서동훈, 서두현, 이창열, 박형일 등이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중국 우수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고위 관리들로 중국에서 개최되는 한반도와 북한문제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하여 한국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알리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통일부가 중국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또 다른 통일공공외교 활동은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국제전략연구소로 하여금 한반도 문제 학술회의를 개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북핵문제 전문가이자 진보적 성향의 한반도 전문가인 주평(朱鋒) 교수가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소집하여 연례적으로 이 회의를 주관해 왔다. 중국 학계에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는 중국 학계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한반도 문제 담당 실무자들도 참여하고

있어 훌륭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무대가 되고 있다.

중국 현지 동포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언론홍보도 통일부가 중국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통일공공외교 활동이다. 통일부는 한·중 수교 직후부터 헤이룽장(黑龍江), 지린(吉林), 랴오닝(遼寧) 조선족 신문에 국내학자의 칼럼을 기고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조선족 사회에 한국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을 홍보해 왔다. 그리고 통일부 장관과 차관 등 간부진이 중국 동북3성과 베이징 등을 방문하여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2년 10월에는 류우의 통일부 장관이 베이징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정세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한국 정부의 통일외교 구상을 중국 내 조선족과 동포들 및 중국 학생들에게 설파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여론을 우호적으로 유도하고자 했다.⁴⁰

2012년 베이징에서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주관으로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⁴¹ 류우의 통일부 장관이 이 회의의 기조연설자로 참여하여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에게 한반도 평화통일 구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통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대중 통일공공외교가 비중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부가 마련한 자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학자들이 참여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한국의 평화 통일방안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반도 통일문제에 초점을 맞춘 한·중 간 국제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도록 중국 측을 설득하고, 이러한 장소에 중국의 비중 있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여론을 중국 내에 확산시키고자 했다.

남북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⁴⁰ 『연합뉴스』, 2012년 10월 25일.

⁴¹ 『한겨레신문』, 2010년 10월 22일.

정부에 들어서 통일부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통일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3년 10월 중국 연변대학교에서 통일부 주관 하에 한국과 중국의 북핵문제 전문가들이 모여 북한 내부정세, 북핵문제 해결방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그리고 한·중의 협력방안에 대해 1차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11월에는 통일부 청사에서 한·중 전문가 제2차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북한 내부정세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북핵문제 등을 논의하고 한·중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2013년 6월 박근혜-시진핑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형태의 전략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통일부 주도하에 한·중 전문가 사이의 북핵문제와 북한 문제에 대한 대화가 활발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통령 직속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도 중국 내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지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는 핵심 행위자다. 2009년 7월 민주평통 중국협의회가 설립된 이래 현재 베이징협의회, 칭다오협의회, 광저우협의회, 상하이협의회 등 중국에 5개의 협의회가 설립되어 활발하게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벌이고 있다.⁴² 이들 협의회에 민주평통 관계자와 국내 민간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중국 교민들에게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과 관련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중국 내 5개 민주평통 협의회 자체적으로도 평화통일 관련 발표회, 글짓기 대회, 모금 활동, 통일음악회 등을 통해 중국 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베이징협의회는 2011년부터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교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교민사회의 관심과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였다.

⁴² 외교부, 『2013 중국개황』 (서울: 늘품플러스, 2013), p. 300.

민주평통은 또한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한·중 전문가 평화통일 포럼을 베이징대학교와 인민대학교 등 중국의 우수 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민주평통과 베이징대학 공동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변영과 한·중협력의 신과제” 주제로 한·중 전문가회의를 개최했다. 동북아 평화와 안보 및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평화통일문제를 둘러싸고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와 신경민 MBC 논설위원을 비롯한 한국 측 참석자들이 왕지쓰(王緝思) 베이징대학 교수, 위메이화(于美華) 개혁개방논단 주임, 치바오량(戚保良)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주임, 파오젠이(朴鏗一)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등 중국의 저명한 국제문제 및 한반도 전문가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2010년에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비전” 주제 하에 한·중 평화포럼을 개최했으며, 2011년에는 “한·중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한·중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민주평통 수석부위원장 등 관계자를 비롯, 국내의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왕지쓰 중국 베이징대학 국제학원 원장과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 등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와 관련한 학술토론의 기회를 통해 중국 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한·중 사이의 이해를 제고하고 중국 내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민주평통은 위메이화, 진징이, 주평, 치바오량, 파오젠이, 장롄구이(張璉瑰) 등 중국 내 비중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⁴³

민주평통은 중국인민대학교와 공동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은 2013년 7월 14일 베이징 쿤룬호텔에서 “평화를 묻다(試問和平何在)”를 주제로 중국 측 참여자인 장롄구이, 진찬룽, 뉴진(牛軍), 추수룡(楚樹龍), 청샤오허(成

⁴³ 민주평통 홈페이지, <<http://www.nuac.go.kr>> 보도자료 참조.

曉河) 등과 한국 측 참여자인 정종욱, 박두복, 김흥규, 박병광, 박영호, 이근관, 이남주, 이희옥, 이태환, 전성홍 등이 북한 급변사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등을 논의했다.⁴⁴ 헌법기관인 민주평통이 주관한 회의에서 한국과 중국 학자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전개하는 단계로 발전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대중 통일공공외교가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외교부

전통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역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노무현 정부 시기까지 주중 대사를 역임한 김하중 대사는 여러 차례 신화사, 인민일보 및 CCTV와 인터뷰를 실시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했으며, 세계지식출판사를 통해 저서를 출간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내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데 일조했다.⁴⁵ 이명박 정부 시기 주중 대사를 역임한 신정승, 유우익, 이규형 대사도 부임 이후 중국 신화사, 환구신보, CCTV에 출연하거나 중국 대학을 방문하여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및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중국인들에게 설득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⁴⁶

주중국 대사관 정부공사를 위시한 정부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관들의 주요

⁴⁴ “中韓專家探討朝鮮半島和平機制,” <<http://news.takungpao.com/special/gjdtj5>> (검색일: 2013.7.31).

⁴⁵ 金夏中, 『騰飛的龍』(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2), pp. 176~177. 김하중 대사는 중국에서 발간된 저서를 통해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이익을 제공하며, 대만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려 했다.

⁴⁶ “韓國駐華大使強調: 我們是好隣居,” <http://zqb.cyol.com/html/2012-07/06/nw.D110000zqgnb_20120706_3-04.htm> (검색일: 2013.9.7).

활동 중의 하나는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접촉하고 한·중관계와 북한문제 및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와 국가안전부 산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하여 북한문제와 한반도 안정과 평화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해 오고 있다. 이들 2개 연구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중국 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론을 주도하는 역량 있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주중국 대사관의 정무담당 외교관들도 중국 내 한반도 문제 관련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 핵심 통일공공외교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국 내 영향력이 있는 블로거를 선발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주중 대사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활동이다. 2013년 7월 중국의 파워 블로거 10명을 초청하여 이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고 국립외교원과 외교부를 방문하도록 하여 한국의 대외정책을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한·중관계에서 핵심 현안 중의 하나가 북한문제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행사 역시 중국 민간을 향한 통일공공외교로 볼 수 있다. 더욱이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을 통해 한·중 공공외교 포럼을 창설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외교부 주관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활동 영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중 대사관이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상대로 추진한 통일공공외교 사례의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한 한·중 전문가 좌담회다. 2013년 6월 말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와 한국에서 초청한 학자를 함께 참석시켜 한·중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국에서는 김홍규 교수와 신상진 교수가 발제·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베이징대학의 진징이 교수, 중앙당교의 장렌구이 교수, 중국국제문제연구소의 위사오화(虞少華) 주임,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치바오량(戚保良) 주임 그리고 중국사회

과학원 파오광지(朴光姬) 연구원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인민일보와 신화사 및 CCTV 등 중국의 유력 언론매체들이 좌담회를 취재하여 결과를 방영함으로써 중국의 일반대중에게 공유하도록 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심 주제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문제였기 때문에 좌담회에서도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역할변화 가능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⁴⁷ 북한 핵문제, 북한문제 및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한·중 학자들 간 소통의 기회를 주중국 대사관이 주관한 대표적 사례다.

5) 국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이하 전국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全國人民政治協商會議: 이하 전국정협)를 겨냥한 국회 차원의 통일공공외교 활동은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으나, 트랙1 차원의 對중국 공공외교의 중요한 행위자로 볼 수 있다. 특히 중국 전국인대와 전국정협 지도부 인사들 중 대다수가 중국공산당원들이며 정부의 요직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5년 한·중의원외교협의회가 한·중관계를 평화, 인권, 국제법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관계로 발전하도록 기여하기 위해 창설되었다. 한국 국회의 대중 의원외교 활동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한·중의원외교협의회에 참여하는 의원들 대부분이 중국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갖고 있는 인사보다는 의견을 중시하는 중진급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에 낙선될 경우 대중 외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 역대 한·중 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은 최형우, 서석재, 임채정, 김덕룡, 김무성, 정몽준

⁴⁷ 한반도 통일과 북·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좌담회의 주요 이슈로 논의되었다.

등이다. 현재 한·일의원연맹에 소속된 의원 수는 146명에 이르는 반면, 한·중의회의외교협의회 소속 의원 숫자는 48명이 그치고 있다는 점도 국회의 대중 외교활동이 미약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2013년도 한·일 의원연맹 예산은 5.8억 원인데 비해, 한·중의원외교협의회와 한·미, 한·러 및 한·EU의원외교협의회 예산을 합친 금액은 1.8억 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국회의 대중 통일공공외교가 중요시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⁴⁸ 한·중의원외교협의회 중국 측 파트너는 중·한의원우호소조(1993년 발족, 2003년 재결성)이며, 회장은 장언주(姜恩柱)와 차오웨이저우(曹衛洲) 등 중국 전국인대 의사위 주임이 맡아 왔다. 현재는 2003년 중국외교부 아주국장을 역임했을 때 첸치천(錢其琛)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에게 다자회담 수용을 촉구했던 푸잉(傅瑩)이 리자오싱(李肇星)에 이어 전국인대 의사위 주임을 맡고 있다.

(나) 1.5트랙 차원

1) 동북아시아위원회

한·중 교류와 접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면서, 반관반민 차원에서도 대중 통일공공외교 활동이 다양하고 빈번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노무현 정부 시기에 시작된 한·중 전략토론회다. 한국의 동북아시아위원회와 중국의 개혁개방논단이 주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한·중 전략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북한 핵문제와 남북한관계를 둘러싸고 한·중관계가 비교적 협력적으로 전개되었던 노무현 정부와 후진타오 집권 1기 시대에 한·중 양국의 정부와 집권당 산하 기관이 주도하여 정부 인사와 민간 학자가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형태로 대화가 진행되었다. 대화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북한의 미래와 북·중관계가 상정되어 진행되었으며, 한·

⁴⁸ “교류 17년 허송, 관시는 커녕 중국통 의원도 없어,” 『세계일보』, 2013년 5월 20일.

중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정부 인사와 명망 있는 학자들이 참여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⁴⁹ 특히 남북관계를 협력적으로 다뤄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한·중관계 발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문정인 교수, 이수훈 교수, 이희옥 교수 등이 대화를 주도함으로써 중국 정부 관계자 및 학자들과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이 가능했다. 전략토론회를 통해 한·중 전문가들은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의 한 학자는 북한 위기사태에 대비하여 한·중이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그가 이러한 진전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양국 전문가 사이의 대화와 접촉을 지속하여 신뢰관계가 축적됨으로써 가능했다.

2)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한·중이 북핵문제와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협력하기보다는 대립했지만, 상호 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로 구축해 나가기로 하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한·중관계를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로 구분하여 이들 분과별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한·중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물을 양국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2009년 공식 발족했다. 전문가 공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한·중이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많은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양국 정부 간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와 갈등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한·중 양국 대중의 상호 인식을 개선하

⁴⁹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p. 313.

기 위한 협력방안, 인문교류 제도화, 전략적 상호 인식의 제도화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문제와 한미동맹 등에 대한 양국 정부 간 불신이 심화되었지만, 양국 전문가 사이의 공동 위원회에서 한반도의 비핵화, 6자회담의 제도화와 정례화,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실현을 위한 협력 등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 내 여론 형성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국내 통일·외교·안보관련 국책연구기관들도 중국을 상대로 한 중요한 통일공공외교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은 한국이 중국과 대수급 외교관계를 맺은 1992년부터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매년 양국을 오가면서 정례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통일연구원의 주요 연구주제가 북한문제와 남북한관계 및 한반도 주변 통일환경 조성 등이기 때문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과 통일연구원 간 학술세미나 토론 주제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북한 개방유도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북·중관계 현황과 전망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또한 통일연구원 대표단은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을 방문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 동시에 중국외교부 산하의 중국국제문제연구소와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개혁개방논단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동 연구기관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남북한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심도 있게 교환하는 기회를 가져왔다.⁵⁰

통일연구원이 중국을 상대로 전개한 통일공공외교 중 특기할만한 것은

⁵⁰ 중국 내 한반도 문제 관련 연구기관 상세 내역에 대해서는 전병곤·양갑용,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참조.

중국 정부 내에서 북한문제를 주관하는 정부 관리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다. 1994년부터 3년간 연속적으로 중국 국가안전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치바오량(戚保良), 위메이화, 청위제(程玉潔) 연구원을 초청연구원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1960-70년대 북한에서 출생하거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국비장학생 자격으로 교육을 받은 학자이며 중국 내 1세대 한국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역량 있는 인사들이다. 이들 중국학자들이 통일연구원에서 한국의 북한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한국의 대북정책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북한에 대한 중국 관변학자들의 인식을 한국 학자들이 접할 수 있었다. 1997년부터 1998년 초까지 중국 당 중앙 대외연락부에서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담당해 온 탄자린(譚家林)이 통일연구원에서 3개월간 초청연구원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연구원 내 북한문제와 중국문제 전문가들과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에 대해 논의의 기회를 가졌다. 그는 귀국 후 당 중앙 대외연락부 부장조리까지 승진하여 한반도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고, 의전국장을 담당했을 때에는 김정일 방중 시 단둥(丹東)에서부터 중국 내지를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처럼 비중 있는 인사를 연구원에 체류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서 통일연구원이 중국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유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로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 연구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통일연구원은 협동연구와 현안 과제를 수행하면서 중국 내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통일연구원이 수행한 협동연구에 참여한 중국 전문가들 대부분이 북·중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베이징과 북·중 변경지역의 학자들이었다. 통일연구원이 한반도 통일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중국 내 학자들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킨 사례도 있다. 2011년 임강택 박사가 중국

동북지역의 진저(金哲)와 완하이핑(滿海峰)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북한 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⁵¹ 공동연구 수행과정에서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중국 학자의 견해를 청취하는 한편, 중국학자들에게 한국의 통일방안의 적실성을 인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활동이라고 하겠다.

국내 통일문제 관련 핵심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연구보고서를 중국어로도 발행한 사례가 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한국의 대중 포용정책과 한·중 협력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중국어로 발간하여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에게 배포한 것이 대표적인 시도이다.⁵²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한반도 문제 전문가보다 미국 문제와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중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세가 나타날 조짐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의미 있는 통일문제를 다룬 연구보고서를 중국어로 출판하여 중국 독자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다.

통일연구원이 중국의 전문가들과 대중을 대상으로 통일문제 관련 공공외교를 수행하는 또 다른 사업은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1997년 처음으로 통일연구원(당시 민족통일연구원)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일·중·러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발간했다.⁵³ 당시는 중국학자와 대중을 상대로 북한과 한반도 문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나, 통일연구원은 비공개를 조건으로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

51 임강택·김철·만해봉,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1).

52 申相振, 『韓國對北韓包容政策與中國』 (서울: 통일연구원, 2001).

53 박영호 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가와 일부 중국 민간인의 비공개 협조를 받아 북한문제, 남북한문제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내 인식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일문제 여론조사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 통일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중관계가 급증하면서 수많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데, 통일연구원은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내 오피니언그룹에 속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진행, 한국의 대북 정책과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통일연구원이 초청하여 좌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한 중국기관 대표단과 인사들로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취싱(曲星) 소장, 중국 신화통신사 산시성 지사 변강(邊江) 부사장, 리자오싱(李肇星) 중국국제우호연락회 회장, 왕지쓰 베이징대학 국제학원 원장 및 장롄구이 중앙당교 교수 등이 있다. 이들 중국 기관과 학자들은 중국 내에서 영향력이 있고 비중 있는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좌담회와 세미나 개최는 통일연구원이 한국의 통일정책관련 입장을 중국에 소개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의미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다양한 언론매체와 강연 등의 기회를 통해 중국 일반 대중들에게 한반도 문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북한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내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연구원 이외에도 통일외교안보문제를 다루는 국책연구기관들도 1.5 트랙 차원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외교부 소속 국립외교원(2012년 이전에는 외교안보연구원), 국방부 소속 한국국방연구원,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연구기관들도 남북한관계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를 다루는 역량 있는 전문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연구기관은 중국의 유관 연구소와 학계 전문가들 및 중국 정부 인사들과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와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국립외교원),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중국군사과학원(한국국방연구원) 등과 정례 학술교류 행사를 개최하여 동북아와 한반도 안보정세 그리고 한·중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국립외교원은 한·중 수교 이후부터 중국 국제문제연구소와 매년 정례적으로 학술교류를 진행해 왔으며, 2005년부터 상하이 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와도 북한문제 관련 학술교류를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와도 학술교류를 시작했다. 한·중 외교안보문제 이외에도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도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학술교류는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외교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채널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상기 한국의 외교안보문제 연구기관들은 정부 산하 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중국의 전문가들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접촉과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다) 민간 차원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민간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뿐 아니라 기업과 언론에서도 깊은 관심을 두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들 민간 전문가와 단체들이 중국의 각급 단체 엘리트와 대중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활동 역시 중국 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한 중요한 채널이라고 할 수 있다.

1) 대학, 학술단체

먼저 대학과 학술단체들의 대중 통일공공외교 활동이다. 서울대학교의

I

II

III

통일평화연구원은 2006년 통일연구소로 설립된 이후 2011년 통일평화연구원으로 개칭된 국내 학계를 대표하여 통일문제와 북한문제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이다. 중국 연변대학 동북아국제정치연구소, 베이징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중앙당교, 대련대학교, 중앙민족대학교, 중국외교학원 등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을 중국의 연구자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진행하고 있다.⁵⁴ 2008년에는 “북한과 중국 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과제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중국사회과학원 아태연구소와 베이징대학 조선문화연구소 및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을 방문하여 파오젠이, 장위옌(張宇燕), 진징이, 치바오량 등 중국 내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 전문가와 좌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⁵⁵ 북·중관계 등 한반도 통일관련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접촉을 통해 한·중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동 연구원은 중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대학원생들을 국내에 초청하거나 중국 현지에서 동북아 평화 및 한반도 통일문제 관련 세미나 활동을 개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내 지지여론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를 필두로 한 국내 중국 문제 연구소들도 중국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각종 형태의 학술활동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대학생 교환학생 파견 및 수용, 교환교수 파견 등을 통해 중국에 남북한관계 현황과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특히 성균중국연구소는 2013년부터 『成均中國觀察』 학술지를 중국어로 발행하여 한·중관계와 남북한관계 등에 관한 국내 시각을 중국 학계에 보급

⁵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참조.

⁵⁵ 연구결과물은 김병로 외, 『북한-중국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을 참조.

하고 있으며,⁵⁶ 중앙당교와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협정을 체결하여 한·중 관계 이외에도 북한문제와 한반도 평화와 통일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채널을 갖추었다. 국내 대학 중국문제 연구소가 매년 중국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중앙당교와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 학계가 중국 당·정 간부와 전문가들에게 남북한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성균중국연구소는 중국 내 저명한 전문가와 한반도 문제 실무 관료를 초청하여 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역시 국내 대학이 중국 정부와 엘리트를 상대로 전개하는 중요한 통일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설 연구소 형태로 개설되어 있으며 박재규, 류길재 등 2명의 통일부 장관을 배출한 사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북한과 한반도 통일문제에 연구사업의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 한반도 통일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의 다양한 형태로 학술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⁵⁷ 중국의 연구자들과 학술회의를 시작한 것은 1997년 7월부터다. 중국 길림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동북아 국제관계와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문제 등을 이슈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극동문제연구소와 중국 동북지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의 접촉과 교류가 급증하게 되었다. 극동문제연구소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연례적으로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중국과 북한의 학자들과 남북한과 중국 3국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1930대 중일전쟁과 이후 한·일의 대일 항쟁과정에서의 협력을 핵심 주제로 한 회의였는데, 일본

⁵⁶ 중국어로 발행되는 『成均中國觀察』라는 간행물은 중국외교부 한반도 문제 실무진에게도 배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국내 대학이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행하는 통일공공외교 활동으로 평가된다.

⁵⁷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ifes.kyungnam.ac.kr>> 참고.

의 한반도 침략이 한반도 분단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항일전쟁을 주제로 한 남북한과 중국 간 학술회의에서 한반도 통일문제가 토론과정에서 중요한 의제로 상정되었다. 그리고 남북한 학자가 중국에서 개최된 공동 학술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9년에는 중국 상하이 월슨센터와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 전망에 관한 공동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미국과 중국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미·중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와 관련한 문제를 중국 연구기관과 밀도 있게 논의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은 한국의 민간 학자들과 중국의 민간 한반도 문제 전문가 사이의 교감을 확대시키는 계기로 평가된다.

극동문제연구소는 또한 북한과 접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중국 연변대학교와 2010년 “중국의 입장에서 본 한반도”를 주제로 북한 정세 및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11년에는 연변대학교와 전략대화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동북아 정세와 한·중관계의 변화 전망”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토론과정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민간 학술회의를 전략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개최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중 북한문제와 한반도 문제 전문가 사이에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소장을 맡고 있는 이수훈 교수를 비롯, 북한문제 전문가인 김근식 교수, 류길재 교수, 신종대 교수 등이 참여해 왔다.

이올러 극동문제연구소는 SSPK(Summer Studies Program in Korea)를 통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한반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연구 상의 편의를 제공해 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중국 학자들이 초청연구원 자격으로 거쳐 갔으며, 또한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중국에 귀국하여 중국학계에서 활동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있다. 2000년 이래 중앙당교의 장런구이 교수, 중국정법대학의 한센둥(韓獻棟) 교수, 푸단대학에서 활동하는 팡슈위(方秀玉) 교수 등이 있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도 한반도 문제 연구를 선도하는 학자들인 바, 이들을 배출한 것은 한국의 민간영역이 중국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통일공공외교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중국 연변대학을 교류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재외동포사업을 벌이고 있는 평화문제연구소도 중국을 대상으로 통일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1992년부터 중국 동북3성 지역의 중국학자들과 매년 “중국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방안 모색,” “한·중의 대북정책과 상호협력과제” 등 한반도 통일관련 주제로 한·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남북한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여건 조성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2) 한중친선협회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양한 민간기구들도 대중 통일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세기 전 국회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중친선협회는 한·중 간 신뢰관계를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민간단체로 기능해 왔다. 그는 한·중 수교 이전부터 중국 내 당·정 인사들과 교분관계를 쌓아왔으며, 2004년 8월 한·중관계가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으로 인해 악화되었을 때에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국 지도부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한·중친선협회의 주관으로 한국의 여야 의원들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내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I

II

III

한중친선협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협회의 이세기 회장이 국토통일원 장관을 역임했고 국회에서 외무통일 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해 왔다는 점에서도, 한중친선협회는 중국 측 인사들과 접촉시 한·중 양자관계와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보여 왔다.⁵⁸

한중친선협회는 2004년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으로 인해 악화된 한·중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같은 해 8월 초 이세기 회장이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대외연락부 류홍차이(劉洪才) 부부장과 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타협적 제안을 전달하였고, 이를 계기로 중국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서울에 파견하였으며, 자칭린 중국정협 주석 방한 이전에 한·중이 5개 항의 구두합의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양국 간 역사 갈등이 일시 봉합될 수 있었다.⁵⁹ 고구려 역사문제와 북·중 변경지역 성세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중친선협회의 이세기 회장은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으로 인해 악화된 한·중관계를 푸는데 정부 ‘특사’ 역할을 수행했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한 민간외교 사절이었다고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도 한중친선협회는 한·중 간 친선관계를 구축을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2007년 당시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명박이 중국을 방문할 당시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와의 면담을 주선하기 위해 이세기 회장이 중국 측과 접촉한 바가 있었다. 2007년 말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는 닝푸쿠이(寧賦魁) 대사가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도록 주선해 주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뒤 일본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도록 한·중 양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미·일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중시하는 외교 노선을 표방함으로써

⁵⁸ 이세기, 『이세기의 중국 관계 20년』 (서울: 중앙북스, 2012), pp. 4~9.

⁵⁹ 위의 책, pp. 216~222.

한중친선협회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또한 한중친선협회는 중국 베이징대학교에 ‘이명박학(學) 특별강좌’를 개설하여 한국과 중국 내 저명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정철학을 중국 내에 홍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⁶⁰ 이명박 정부 시기 한·중 사이에는 한미동맹 문제와 북한문제로 인해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한중친선협회의 이러한 공공외교 노력은 기대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한·중 간 정부 및 민간영역에서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2013년 한국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중국인 3명을 초청하여 파주 적군 묘지를 방문하도록 한 것은 한·중문화협회가 민간영역에서 중국을 상대로 추진한 의미 있는 통일공공외교의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중국에서 북한과의 전통우호관계 지속을 주장하는 핵심 그룹이 인민지원군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라는 점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중국인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한·중관계 발전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의 대북한 정책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은 중국 공산당 중앙지도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중국의 대중과 전문가들 상대로 한 통일공공외교를 비중 있고 체계적으로 전개하지 못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공공외교는 민간 학술단체와 1.5트랙의 주도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 차원의 통일공공외교로는 대통령 방중 시 중국 저명대학을 방문하여 강연을 실시한 것과 주중 대사관 정무팀 주도로 중국 관변연구기관과 교류를 진행된 것이 특기할만한 것이었다. 민주평통이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 활동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⁶⁰ 위의 책, pp. 275~281.

따라서 중국에 대한 통일(공공)외교는 체계성과 일관성이 없이 산만하게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국민 여론이 점차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 향후 중국 정부 및 전문가 그리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통일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전문가 그리고 대중들이 한반도 통일관련 문제에 대해 우호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내 통일문제 전문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대중 통일공공외교 체계를 수립하고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2) 문화외교 추진실태

공연이나 전시활동 등 문화를 매개로 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활동은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대상도 중국 대중이 아닌 교민을 상대로 한 것들이다. 중국과 북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 정부나 민간단체들이 중국에서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를 제약 없이 다루기가 곤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화외교 차원에서 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는 다음과 같다.

(가) 정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를 다루면서 중국의 협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한미동맹을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 시기였다.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을 거치면서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한·중 간 갈등이 심화되고 한·중 정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면서 대중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 한국 정부가 중국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고 대외정

책을 전개하는데 실망하여 중국 관리들이 한국 외교관을 잘 만나주지 않는 등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공공외교가 강대국들의 새로운 외교활동 영역으로 중시되면서 가치외교를 중시하였던 이명박 정부도 외교부 내에 공공외교대사를 임명하고 문화외교국을 신설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전통외교가 장애에 직면했을 때 문화교류를 통해 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2008년 정상회담 공동성명문을 통해 한·중은 처음으로 인문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도모하려는 시도였다.

2013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제1차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개최됨으로써, 중국을 상대로 한 한국의 문화외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한·중 간에는 역사·문화적으로 깊은 유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를 매개로 관계발전을 추진하기가 용이하다. 양국의 정부 주도 아래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스포츠, 드라마, 음악회 등과 같은 문화행사를 통해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고 양국이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바를 성취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문화활동을 매개로 하여 중국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통일공공외교 활동은 중국 내 조선족과 교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평통의 행사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민주평통은 중국 내 교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바, 칭다오 협의회와 광저우 협의회, 베이징협의회가 통일음악회, 통일강연회, 도전 통일골든벨, 백두산 통일 등반대회, 통일 한마음 걷기대회 등을 실시하였다. 이들 행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국 내 교민을 주요 타깃으로 추진되어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중국 교민들이 현지 중국인들과 접촉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중국 국민들에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동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치러진 행사 중에는 다롄(大連) 주재 한국 영사사무소와 다롄외국어대학이 주최하는 중국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 한국 드라마 이외에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주제를 발표한 학생도 일부 있다는 점에서,⁶¹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유발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 1.5트랙 차원

국내 공공외교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중 청소년 교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9년부터 연 2회에 걸쳐 중국 청소년 400여 명씩 국내에 초청하여 문화체험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국내 학생을 선발하여 중국에 파견하는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차세대 중국을 이끌어 나갈 중견 간부와 학생들을 외교부로 초청하여 한·중관계 특강을 실시하는 한편 한국 기업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현황과 발전상을 알리고 있다. 북한문제와 남북한관계 전문가 특강 실시를 통해 미래 중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 간부들에게 한반도 분단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 한국학 학술대회 지원사업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중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일공공외교 활동이다. 2000년부터 한국학 과정을 설치한 중국 내 대학교를 지원하여 국내 학자들과 공동으로 중국 한국학 학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과와 경제무역분과 외에도 정치외교분과가 개최되고 왔다. 특히 정치외교분과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한국학 전문가들

⁶¹ <<http://kr.dlufl.edu.cn//zxdt/2013-06-06/33438.htm>>.

이 남북한관계와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중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되고 있다.⁶²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중국 내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학술지원사업 중에 통일공공외교 활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중국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에게 남북한문제에 대한 연구사업을 지원하였고, 우한대학에 북한 핵문제와 북핵 위기관리 연구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이들 중국 대학교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해 중국 내 북한문제와 북핵문제에 대한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1.5트랙 차원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로 평가된다.

(다) 민간 차원

교육부 주관으로 한·중·일 대학 간 교류 및 교육분야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2011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저명한 3개 대학교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학생 교환과 학점 교류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고려대, 푸단대, 고베대가 동아시아 위기관리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북한문제와 북핵문제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위기요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북한과 남북한관계 및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소개하는 교과목을 중국 학생들에게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중국학생들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⁶³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는 국내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 대학생을 대

⁶² 2007년 연변대학에서 개최된 7회 대회에서는 철학종교분과, 사회종교분과 및 문화예술분과와 함께 정치외교분과가 개최되었으며, 2010년 산둥대학교에서 개최된 11회 대회에서는 철학사회, 문학교육, 역사문화, 경제무역분과와 함께 정치외교분과가 열렸다.

⁶³ 현재 한·중·일 캠퍼스 아시아 컨소시엄은 고려대+푸단대+고베대, 동서대+광둥외국어대+리츠메이칸대, 부산대+상하이교통대+규슈대, 서울대+베이징대+도쿄대, 서울대+베이징대+히토쓰바시대, 성균관대+지린대+오카야마대, 카이스트+칭화대+도쿄공대 등이 있다. <<http://www.campusasia.kr>>.

상으로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2년 한·중 유학생포럼을 개최하였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 수가 2012년 말 현재 5만 5천여 명에 달하여 외국인 유학생 중 63%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중국 유학생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대학들의 유학생 관리는 체계적이지 못하며, 심지어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⁶⁴ 중국인 유학생은 중국에 한국의 실상을 전달하는 직접적인 통로라는 점에서 한반도의 분단 현실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국내에 유학하고 있는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의 활동도 광의의 대중 통일공공외교 활동으로 볼 수 있다.

SK가 설립한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중국 대학과 여론 주도층을 상대로 전개하는 사업 중 일부도 통일공공외교로 평가받을 수 있다. 2002년부터 중국 베이징대학, 칭화대학, 푸단대학 및 중국사회과학원에 아시아연구센터를 개설하고 현재는 동북지역의 랴오닝대학을 포함 12개의 중국 내 대학에 아시아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중국학자들의 학술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40-50명의 중국학자들을 국내에 1년간 초청하여 한국 학자들과 학술교류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언더스탠딩 차이나(Understanding China)’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여 국내 학자들과 한·중 외교 안보관계와 관련한 사안들을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역시 학술 활동을 매개로 자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 개선과 한·중관계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⁶⁴ 민귀식, “재한 중국인 유학생 현황과 한국생활 적응 및 갈등,” 『한·중 INChina Brief』, Vol. 246 (인천발전연구원, 2013), pp. 4~7.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대한 중국 전문가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국내 민간기업의 對중국 사업이라고 하겠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종교단체와 북한 인권단체들이 중국과 북한 변경지역에서 조선족에 대한 선교활동을 전개하고 탈북자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러한 활동 역시 중국에서는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단속을 받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대중 통일공공외교의 일환이다. 한국의 종교계 인사들이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북·중 국경 지역의 조선족들을 만나 종교 자유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설파함으로써 은연 중에 북한보다는 한국의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에 호감을 갖도록 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선호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통일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단체의 재중 탈북자 지원활동도 민간 차원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로 볼 수 있다.

(3) 미디어외교 추진실태

지금의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실시간대로 전송되는 정보 화시대로 지칭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세계 여론을 선도하고 있다. CNN, BBC, AFP (L'Agence France-Presse: AFP) 등 통신사들은 전 세계에 특파원을 파견하여 자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취재하여 보도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에 유리하게 국제 여론을 조성해 나가려 하고 있다.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국민들과 중국 지도부의 인식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이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도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실상이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I

II

III

대북 비판의식을 싹트게 할 경우 이는 중국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⁶⁵ 그러나 미디어를 활용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활동은 신중하고 용의주도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디어 공간에서 양국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를 통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사례를 살펴본다.

(가) 정부 차원

청와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언론인을 초청하여 실시하는 간담회가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개최하는 주요국가 언론인 초청 간담회가 있고,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인민일보와 신화사 등 중국의 대표적인 언론 매체와 대담을 통해 사전에 한·중 간 친선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다.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인민일보 등 중국 언론매체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담을 통해 한국의 대북정책을 중국인들에게 소개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⁶⁶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7월 방중 직전 청와대에서 왕천(王晨) 인민일보사 사장 등 대표단과 회견을 갖고 한·중관계 발전과 북한 핵문제 및 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중국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했으며,⁶⁷ 이명박 대통령 역시 2008년 5월 말 방중 직전 청와대에서 인민일보 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사천성(四川省) 대지진에 대한 위문의 뜻을 중국 국민들에게 전달

⁶⁵ 중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데 있어 미디어의 효용성에 대한 주장은 이상철, “북한은 왜 중국 언론 통제에 목숨 거나,” 『중앙일보』, 2013년 4월 10일.

⁶⁶ 『人民日報』, 2000년 2월 18일; 『人民日報』, 2002년 6월 5일.

⁶⁷ “盧武鉉會見人民日報社長并接受人民日報專訪,” <<http://www.sina.com.cn/o/2003-07-04/0223315495shtml>> (검색일: 2013.8.30).

했다.⁶⁸ 이와 같이 중국의 대표적인 언론매체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중국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장 영향력 있는 통일공공외교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중국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공공외교의 대표적 사례는 외교부가 주도하고 있는 중국 파워 블로거 초청사업이다. 중국 파워 블로거 초청사업은 2012년 7월 처음 실시되었는데, 20만 명이 넘는 팔로어를 가진 왕닝퉁(王寧彤)을 비롯한 14명의 블로거를 초청하여 성균관에서 한국의 유교문화를 소개하는 등 한국 알리기 활동을 전개했다. 2013년에도 외교부는 박근혜 대통령 중국방문 직후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2008 베이징 올림픽 기계체조 금메달리스트, 기업인, 학자, 작가, 평론가,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포함한 10명의 파워 블로거를 초청하여 문화계와 학술단체 인사와 접촉을 갖도록 하는 한편,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소 방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방문 및 DMZ와 경주 등 관광지를 시찰하도록 했다.⁶⁹ 한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의 파워 블로거들이 자신의 웨이보 계정을 통해 분단 현장과 발전상 등 한국방문 소감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중국 내 팔로어들이 이를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외교부가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파워 블로거 초청 프로그램은 미디어를 활용한 정부 차원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또한 2012년 7월부터 중국 내 온라인 매체(텅신망, 웨이보, 웨이신 계정 등)를 직접 활용하여 중국에 한국의 매력을 홍보하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수억 명에 이르는 사용자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실상을 중국에 알리고 한-중 간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2013년도 외교부는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 중 ‘매력한국 알리

⁶⁸ 『人民日報』, 2008년 5월 27일.

⁶⁹ 『중앙일보』, 2012년 7월 12일.

기' 사업비로 67억 원을 편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과 공동으로 한·중 고위 언론인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09년 1차 포럼이 개최된 후, 2013년 7월 현재 5차 포럼이 개최되었다. 2012년 중국 언론인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외교부가 이들에게 남북한관계 현실 및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도 했다. 중국의 고위 언론인과 한국 언론인 간 접촉 기회가 증가되면 북한문제와 한미동맹 등을 둘러싼 한·중 간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내 지지여론을 확산시키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나) 1.5트랙 및 민간 차원

우선 KBS가 진행하는 한민족방송과 국제방송이 있다. 한민족방송은 라디오 채널을 통해 북한 동포와 중국 내 조선족들에게 한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통일열차', '시사초점', '탈북인 성공시대'와 같은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한국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을 거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한국에 대한 중국 내 조선족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KBS 국제방송 역시 재중 한인과 중국인들을 상대로 한국의 실상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KBS가 송출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접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랑 TV가 2012년 6월 중국의 파워 블로거를 초청하여 국립외교원 등 북한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을 방문하도록 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도 대중 미디어외교의 대표적 사례다.⁷⁰ 한·중관계와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토론도 이루어짐으로써 한국의 언론매체가 중국의 여론 주도층을 통해 중국에서 한반도 통일 지지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했다고 평가된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국내 3대 신문사가 주요 기사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홈페이지에 탑재함으로써 중국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중 관계와 한국의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외정책 및 대북정책, 남북한 관계 등 중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 등을 중국어 홈페이지에 싣고 있다. 한국문제에 관심을 가진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와 대중들이 한국을 접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이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고 한미동맹 강화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논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인들에게 한국이 실제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하는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중앙일보가 중국의 인민일보와 일본 니혼게이지아이신문(日本經濟新聞)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중·일 30인회도 의미 있는 미디어 공공외교다. 2006년 시작된 미디어 외교 활동으로 한·중·일 3국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모여 동북아 공동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2013년에는 3국 공통한자 마련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⁷¹ 3국의 대표적인 언론매체가 주도하여 3국 협력을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가 인민일보를 통해 중국의 독자들에게도 전달된다는 점에서 30인회에서 논의되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방안 등은 한반도 안보와 통일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을 우호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와 한·중 친선협회 등 민간단체들도 중국의 파워 블로거를 초청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

⁷⁰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http://www.knda.go.kr/study/seminar/index.jsp?ifans=001&menu=m_30_30> 참조.

⁷¹ 『중앙일보』, 2013년 7월 8일.

2013년 4월 경상북도는 중국의 파워 블로거를 초청하여 안동과 경주 등 관광자원을 둘러보게 하고 박정희 생가와 새마을운동 발상지를 시찰하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러한 활동은 중국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켜 궁극적으로 한국의 통일에도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로 볼 수 있다.

(4) 통일관련 공공외교 추진 실태: 북핵문제 협력 유도 노력

김대중 정부 시기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한·중이 북핵문제에 대해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북핵 외교는 정부 레벨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중국의 학계 전문가들과 대중이 중국의 북핵 정책에 영향을 중요한 미치기 어렵다는 판단도 중국의 일반 대중 및 여론 주도층 보다는 중국 정부에 초점을 맞춰 북핵 외교를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에 대한 한·중 정부 간 협력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공공외교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 북핵 외교를 전개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북한 핵무기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중국인들에게 알림으로써 중국 내에 북핵 저지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국 정부와 반관반민 기구 및 민간 영역에서 북핵 저지에 대한 중국의 지지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공공외교 실태를 살펴본다.

(가) 정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대중 공공외교 노력은 전략대화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통일부와 외교부 및 민주평통이 중국의 북핵문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개최한 학술회의를 통해 이루어

졌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한·중은 정부 관료와 민간 전문가를 함께 참여시켜 전략대화(중국은 ‘전략토론회’라는 명칭을 사용)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한·중관계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관한 이슈 이외도 북핵문제를 주요 논의 사안으로 상정하여 다루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북핵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전문가들과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토론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더욱 강력하게 반대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중국과 전략대화를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북핵 저지 노력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자 했다.

북핵 6자회담 주무부서인 외교부와 대북정책 주관부서인 통일부 그리고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이 중국을 상대로 추진할 수 있는 북핵문제 관련 통일공공외교는 중국 내 북핵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를 활용하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정부 기관이 전면에 나서서 북핵 전문가를 섭외하여 국내에 초청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으나, 중국의 북핵 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하여 이들에게 한국의 북핵정책을 설명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외교부의 경우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소를 통해 중국의 북핵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 전문가들과 북핵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북핵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변화 유도를 모색하고 있다. 2011년 4월 중국 외교부 외교정책자문위원회 대표단과 북핵문제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1년 11월 전 중국외교부 한반도판공실 주임 양시위(楊希雨) 연구원, 중국 인민대학 진찬룽(金燦榮) 교수, 중국외교학원 쑤하오(蘇浩) 교수 등을 초청하여 한국의 북핵 전문가들과 북핵문제를 토론하도록 하고, 2012년 6월 국립외교원이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학자들과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토론회를 갖고 북핵문제와 북한 미사일 문제 등을 논의한 것은

I

II

III

대표적인 사례들이다.⁷²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주무부서인 통일부도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을 상대로 초보적이지만 북핵문제 관련 공공외교를 시도하고 있다. 장롄구이, 진창이(金强一) 등 중국의 저명한 북핵문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내부 비공개 좌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베이징 주재 통일관이 중국에서 개최되는 북핵문제 세미나에 참가하여 중국의 북핵문제 전문가들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광의의 대중 통일문제 관련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중국의 북핵 전문가와 대중을 상대로 추진해 온 공공외교는 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평통이 북핵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대상은 주로 재중 교민과 조선족들이라는 제약이 있다. 2013년 8월 한반도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의 대표적 북핵문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베이징 쿤룬(崑崙)호텔에서 개최한 한·중 국제회의와 같은 시도도 있었지만, 민주평통의 對중국 북핵 협력 유도 노력은 중국 내 5개 협의회를 통해 중국 교민과 조선족을 주요 대상으로 정부의 북핵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나) 1.5트랙 차원

1.5트랙 차원에서 중국을 상대로 북핵관련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주요 행위자는 통일연구원, 국방연구원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국책연구기관들이며, 이명박 정부 시기에 시작된 한·중 전문가 공동위원회도 북핵문제가 한·중관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⁷² 국립외교원 홈페이지 <http://www.knda.go.kr/study/seminar/index.jsp?ifans=001&menu=m_30_30> 참조.

통일연구원은 북한문제와 통일정책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북핵문제도 주요한 연구영역이다. 따라서 통일연구원은 중점연구과제, 협동연구 및 수시 과제 형태로 북핵문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북핵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북핵문제 학술회의도 개최하고 있다. 통일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북핵문제 관련 연구결과물은 중국의 한국문제 전문가들도 중요하게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연구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북핵 인식과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통일연구원의 초청에 응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 협력방안에 관한 학술토론을 진행한 중국의 북핵 전문가들은 중앙당교 장렌구이 교수, 베이징대학 주평(朱鋒) 교수, 인민대학 스인홍(時殷弘) 교수, 위샤오화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위메이화 중국 개혁·개방논단 주임 등이 있다. 또한 통일연구원은 중국에서 북핵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국제문제연구소, 군사과학원 등 기관들과도 정기적으로 학술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북핵문제 전문가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통일연구원이 구축하고 있는 중국의 북핵 전문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방연구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중국의 북핵 전문가들과 추진해 온 학술교류도 의미 있는 대중 통일관련 공공외교로 분류될 수 있다. 국방연구원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핵문제를 기술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군사과학원, 중국국제전략학회 등과 정례 학술교류를 진행하면서 중국의 핵문제 전문가들과 북핵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한·중 국방학술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여기에서도 중국의 군사전문가들과 북핵문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2013년 발간된 “북핵과 중국의 핵심이익” 제목의 안보정세 분석보고서와 같이 중국에 북핵문제에 대한 기존의 정책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도 광의의 대중 공공외교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⁷³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북핵문제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국의 북핵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있으며, 중국의 북핵문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전환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주평, 자오후지(趙虎吉), 청샤오허 등 중국 내 북핵문제 전문가들이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주최 북핵문제 세미나에 참석하여 한·중 간 북핵문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또한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등 중국 내 북핵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기관과도 정례 학술교류를 진행함으로써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기 한·중 전문가 공동위원회가 구성·운영되었는데, 정부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지만 민간 학자 위주로 운영된 공동위원회였다는데서 1.5트랙 차원의 대중 공공외교로 평가된다. 이태환, 이동률, 신정승, 유호열, 한석희 등 정부의 대중정책 자문활동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이 참석한 한·중 공동 정치분과회의를 통해 중국의 북핵문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중국의 지지를 요청했다.⁷⁴

(다) 민간 차원

중국 일반 대중과 학자들이 중국 정부의 북핵정책 결정과정에는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학계와 언론계 등 민간단체와 개인들도 북핵문제 세미나 개최 및 중국의 당정 인사와의 교류 기회 등을 통해 중국 정부와 중국의 여론 주도층에게 북핵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북핵정책 변화 유도에 일정 부분 기여하려 하고 있다.

먼저 언론매체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북 및 북핵정책에 중국

⁷³ 이창형, “북핵과 중국의 핵심이익,” 『KIDA 동북아안보정세분석』 (2013.8.7).

⁷⁴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한국위원회,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백서』 (2012.12), pp. 49~59.

국민들의 여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언론매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현재 국내 주요 언론매체들 거의 모두가 중국에 특파원을 상주시키고 있는 바, 이들 언론인들이 중국 내 취재활동을 하면서 중국인들에게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와 관심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민간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앙일보 등 국내 주요 언론매체들이 국제학술회의 개최,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어 칼럼 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 한·중 간 북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주중 언론사 특파원을 역임한 경험이 있는 언론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화벽지성(和壁之聲)’ 회원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나면서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를 전달하는 것도 민간 차원의 대중 북핵 외교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외교·안보관련 학술단체들이 북핵문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거나 북핵문제에 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면담조사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 간 이견을 해소하고 중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2월 국제정치학회가 “글로벌 핵안보레짐의 형성과 동아시아 핵문제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면서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장신선 주한 중국대사를 초청하여 북핵문제를 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한 것도 한·중 간 북핵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부문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3. 전문가 인식조사

가.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1) 문항작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특징

앞에서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분석했지만, 문헌연구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경험적 분석의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인식조사는 기존 실태연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완, 실제 관련 현장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통해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실질적 경험과 인식의 실태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전문가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 내용도 앞에서 분석한 내용과 연계시켜 구성하였다. 즉,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과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특히 2012년 수행된 중국의 對한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공외교, 통일공공외교 등에 대한 개념의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규정한 공공외교, 통일공공외교 등에 대한 개념정의를 전문가들에서 먼저 제시함으로써 연구와 조사의 일관성 및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통일공공외교와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구분했으며, 이에 관한 개념정의 및 관련 문항을 분리에서 구성하였다. 특히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문항들은 시기적으로 북한 핵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북핵 관련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설문은 총 3개의 부분,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부는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적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이고, 2부와 3부는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와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실태 파악을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기본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부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에 관한 문항은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효과, 추진목표, 추진체계, 행위자, 수단, 프로그램, 대상 지역, 주요 자산 등 8개로 구성되었다. 2부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관해서는 통일공공외교의 추진효과, 접촉통로, 대상, 내용, 장애요인, 우선순위, 추진 체계 등에 관한 19개의 질문으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특히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추진효과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통일공공외교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반도 통일의 형태, 목표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했으며, 향후 통일공공외교와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중점 방향에 대한 질문도 추가하였다. 또한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문항을 통해 역대 한국 정부별 통일공공외교의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했다. 그 밖에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따른 순위를 기입하는 방식을 통해 비교를 통한 측정의 엄밀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3부에서는 한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 관한 문항으로 주로 북핵과 관련한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 북한의 핵개발 의도,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목표와 성과, 추진체계 등에 대한 9개 문항이다. 특히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중국인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질문들을 포함하였고, 동시에 한국의 對중국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목표와 대상의 효용성을 측정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북핵 정책에 있어 대중 여론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측정 문항도 추가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기본적 특징을 알기 위한 문항으로 소속기관과 관련 분야 경력에 대한 2개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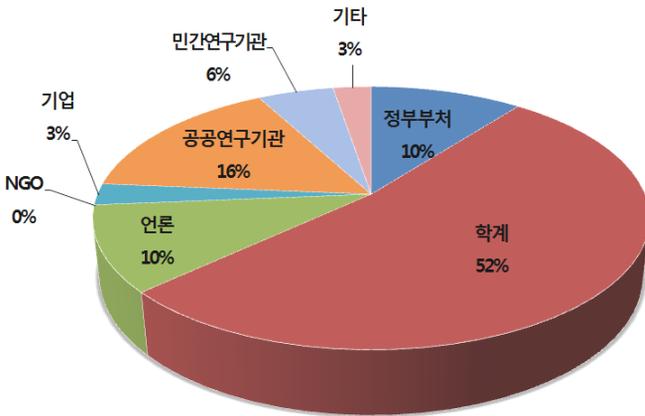
(2) 전문가 선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과 특징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실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보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한반도와 공공외교 관련실태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전문가 40명을 선정했으며, 선정기준으로 한반도 및 공공외교에 관련한 전문성을 우선시하였다. 한국의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조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국적도 한국과 중국 각 20명씩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및 통일공공외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의 중국 전문가와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경험과 식견을 종합해서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국적에 따른 전문가들의 의견 차이는 이번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이 조사의 목적이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파악에 있기 때문에 양국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의견을 취합하는 데 그 의미를 한정지었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 대상인원이 적기 때문에 국적별 인원을 구분할 경우 통계적 의미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국적별 전문가의 인식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비교 분석을 제공하였다.

전문성을 기준으로 중국 측에서는 공공외교 종사자나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관료, 언론인, 기업인, 정책연구기관의 연구원, 한반도 관련 인재를 양성하면서 정책결정에 일정부분 기여하는 대학교수 및 연구원, 한반도 관련 국제 NGO 활동가 등이 포함되었다. 한국 측 역시 공공외교 종사자나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료들이 포함되었고, 특히 중국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 관료, 기업인, 정책기관 연구원, 대학교수 등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소속기관 분포는 학계 종사자가 과반 이상인 52%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16%의 참여자가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언론과 정부부처 전문가가 각각 10%, 민간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6%, 기타와 기업이 각각 3%로 나타났다.

〈그림 II-5〉 중국 전문가의 소속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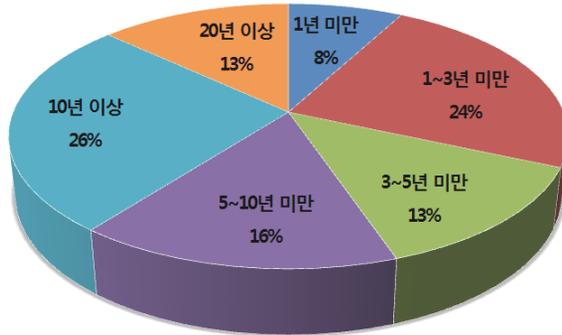
조사 대상 중국 전문가들의 한반도통일 관련 업무나 연구 경력은 대체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업무경력 10년 이상 전문가가 26%로 가장 많았고, 1~3년 미만 경력의 전문가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5~10년 미만의 경력을 소유한 전문가는 16%, 20년 이상과 3~5년 미만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각각 13%였다. 8%의 응답자만이 1년 미만이라고 대답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I

II

III

〈그림 II-6〉 업무 경력



이 밖에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과 분포도 고려했다. 2012년 연구 때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관련 전문가가 많은 북경지역과 상해지역의 전문가를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한반도와 지정학적으로 밀접한 동북지역 전문가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이번 조사는 2012년 조사와 달리 한국의 대중 통일공공외교 실태를 분석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험이 풍부한 한국 내 거주 중국인 전문가들 역시 설문 대상에 추가하였다. 총 20명의 중국인 전문가 중 북경 및 상해지역 전문가 11명, 동북지역 전문가 4명, 한국 거주 6명을 선정하여 조사 대상 전문가들의 지역적 편중을 방지하고 조사 표본의 대표성과 적실성을 높이고자 했다. 조사 방법은 면접조사와 이메일을 통한 설문지 회수 방법을 병행하였고, 조사 기간은 2013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였다.

나.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

(1)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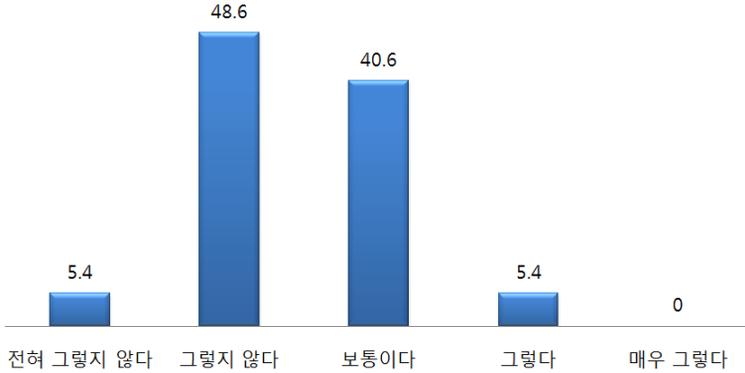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는 일반적 공공외교의 하위개념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일반 공공외교 추진 실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설문 1부에서는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2012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가 국가별 상황과 전문가들의 경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규정한 공공외교의 정의를 먼저 제시하였다.⁷⁵ 이후,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추진체계, 주요 행위자, 주요 수단, 프로그램별 중요도, 대상지역, 주요 자산 등을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공공외교 일반에 대한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이다.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가 정의하는 공공외교의 정의에 비추어볼 때, 한국이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분석한 결과 ‘그렇지 않다’가 4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보통이다’가 40.6%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가 각각 5.4%로 가장 낮은 비중이었다. 대체적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한국의 공공외교 성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공공외교 일반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해왔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격과 국력에 비례해 공공외교의

⁷⁵ 본 연구 역시 2012년도 연구에서 정의한 공공외교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즉,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란 외교적 자산을 활용하여 상대방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informing) 이해(understanding)시켜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국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 자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을 일컫는다. 이교덕 외, 『중국의 對한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2-04 (서울: 통일연구원, 2012) 참고.

성과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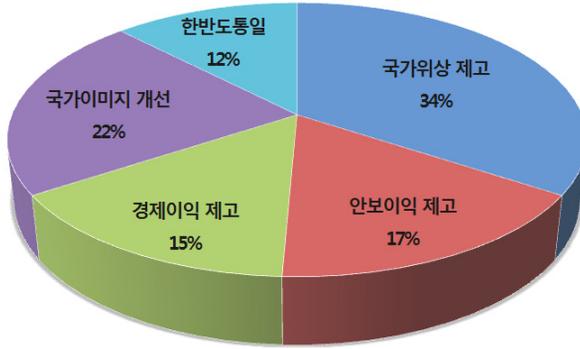
〈그림 II-7〉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 성과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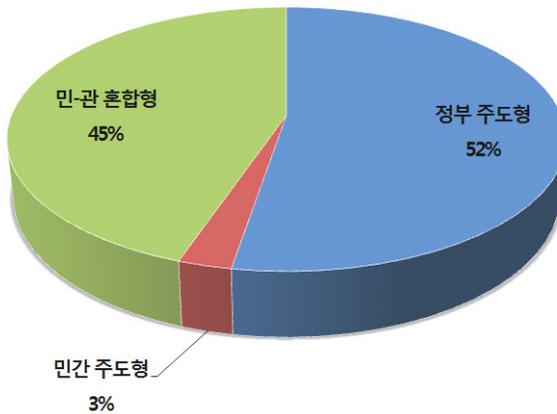
둘째, 한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국가 위상 제고,’ ‘안보 이익 제고,’ ‘경제 이익 제고,’ ‘국가 이미지 개선,’ ‘한반도 통일’의 5개 선택지를 제시했고,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하도록 질문하였다. 그 결과 ‘국가 위상 제고’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가 이미지 개선’이 22%였다. 그 뒤를 이어 ‘안보이익 제고’가 17%, ‘경제이익 제고’가 15%를 차지했다.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 ‘한반도 통일’로, 12% 였다. 한국이 추진하는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에서 한반도 통일이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공공외교 일반에서 통일이라는 이슈가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고 혹은 안보 이익보다 상대적으로 하위개념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8〉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



셋째,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정부 주도형’으로 52%를 차지하였고, ‘민·관 혼합형’이라는 응답은 45%로 그 뒤를 이었다. ‘민간 주도형’이라는 응답은 3%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여전히 한국 공공외교는 정부나 기관이 주도하고, 민간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도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9〉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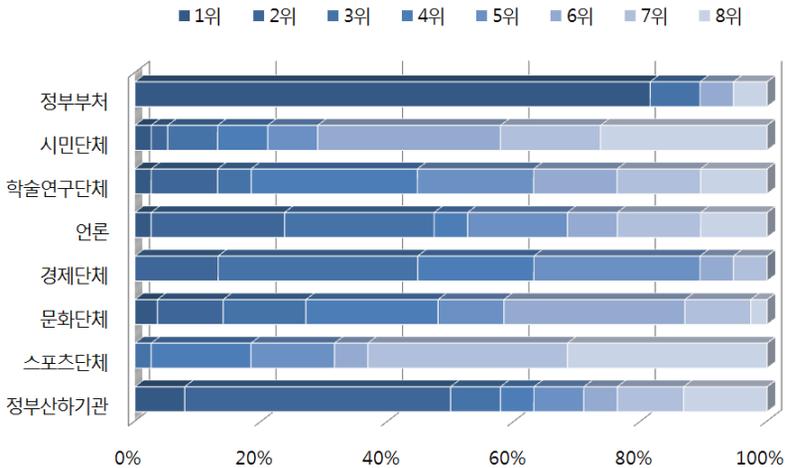


I
II
III

넷째,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에 대한 질문이다.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 정부산하기관의 8개 선택지를 제시한 후,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1부터 8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1위는 ‘정부부처’가, 2위는 ‘정부산하기관’, 3위는 ‘언론’, 4위는 ‘경제단체’, 5위는 ‘학술연구단체’ 순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6위 ‘문화단체’, 7위는 ‘시민단체’, 8위는 ‘스포츠단체’로 인식되었다.

공공외교의 주요행위자에서도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이 관주도형이라는 인식의 특징이 잘 나타났다. 여전히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를 주로 정부부처나 정부관련 산하 기관으로 보고 있으며, 민간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림 II-10〉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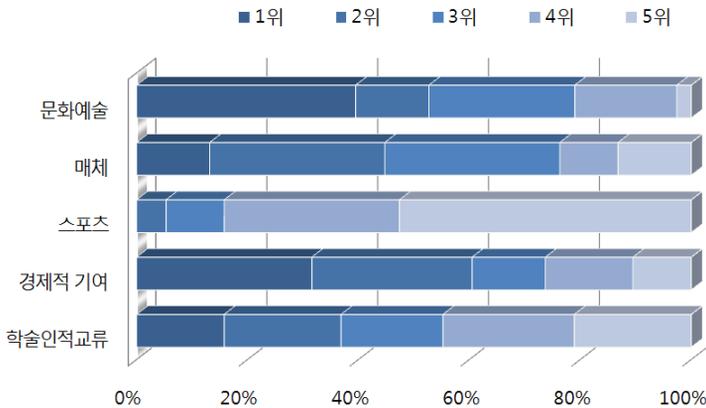


다섯째,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에 대한 질문이다. 문화·예술, 매체, 스포츠, 경제적 기여(ODA 등), 학술·인적교류의 5개 선택지를 제시한 후 1부터 5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위는 ‘문화

예술'이, 2위는 '경제적 기여'로, 3위 '학술·인적교류,' 4위는 '매체'로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는 가장 낮은 5위로 나타났다.

주요 수단에 대한 설문에서 매체의 역할이 생각보다 낮게 나타났다. 문화 예술적 콘텐츠들이 주로 매체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매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문화예술과 매체의 혼동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기여 측면이 상당히 부각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11〉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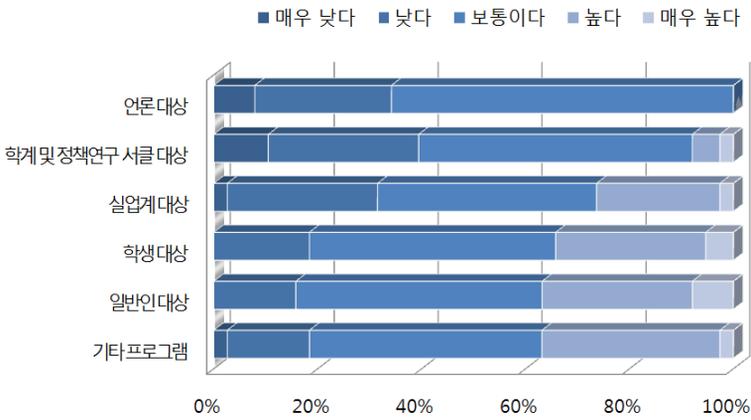


여섯째, 한국이 추진 중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비중(중요도)에 관한 질문이다. 전문가들에게 언론 대상 프로그램, 학계 및 정책연구 서클 대상 프로그램, 실업계 대상 프로그램, 학생 대상 프로그램,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이라는 6개의 선택지를 제시한 후, 중요도에 따라서 '매우 낮다'부터 '매우 높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 '실업계 대상 프로그램'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4위는 '기타 프로그램,' '학계 및 정책연구 서클 대상 프로그램'은 5위를 기록했다. '언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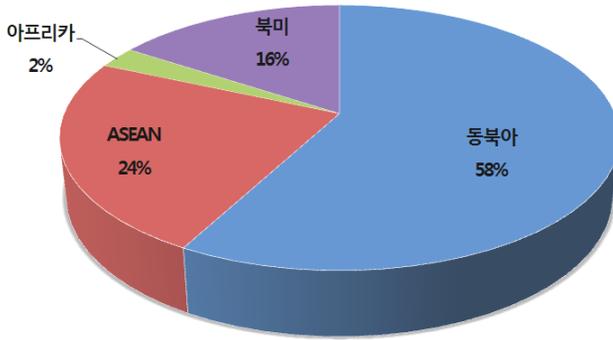
론 대상 프로그램'이 6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공외교가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II-12〉 한국 공공외교 프로그램별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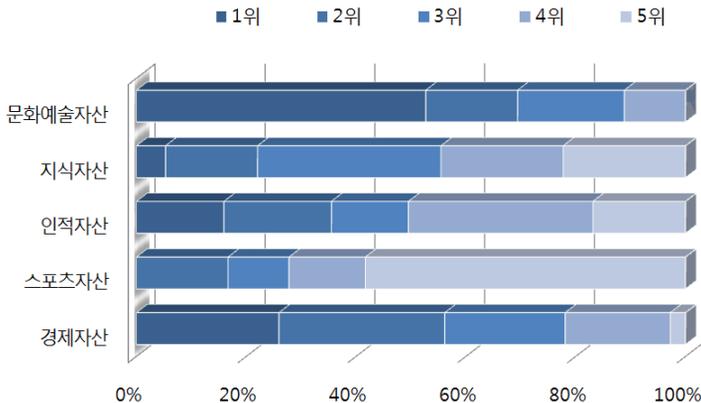
일곱째, 한국이 추진 중인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지역에 대한 질문이다. 그 결과는 한국의 공공외교가 동북아, 동남아, 북미 등의 순으로 중요도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는 응답비율이 58%로 가장 많았고, ‘ASEAN’이라는 응답이 24%로 2위를 차지했다. ‘북미’는 16%를 기록했고, ‘아프리카’가 가장 낮은 2%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한국이 중시하는 지역 비중과는 약간 다른 결과이다. 동남아지역이 북미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한국의 공적개발 원조가 동남아지역에 집중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13〉 한국 공공외교의 대상 지역



여덟째,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에 대한 질문이다. 문화·예술자산, 지식자산, 인적자산, 스포츠자산, 경제자산의 5개 선택지를 제시한 후,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1부터 5까지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하도록 한 결과, ‘문화·예술자산’이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경제자산’이 2위, ‘지식자산’이 3위, ‘인적자산’이 각각 4위로 나타났으며, ‘스포츠자산’은 가장 낮은 5위였다. 이 응답 결과는 볼 때,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은 문화자산임을 알 수 있다.

〈그림 II-14〉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



I
II
III

(2)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2부는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고, 중국인들의 인식과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문항들이 제시되었다.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중국인들의 한반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통일공공외교의 주요 대상과 수단은 무엇인지 등을 질문하였다. 이어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특징, 핵심 주체, 장애요인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전문가들에게는 본 연구가 정의하는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후, 한국이 통일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본 연구는 통일공공외교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상대국 국민들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 행위자들의 의도적 노력, 즉, 한국의 통일 정책 및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행해지는 외교활동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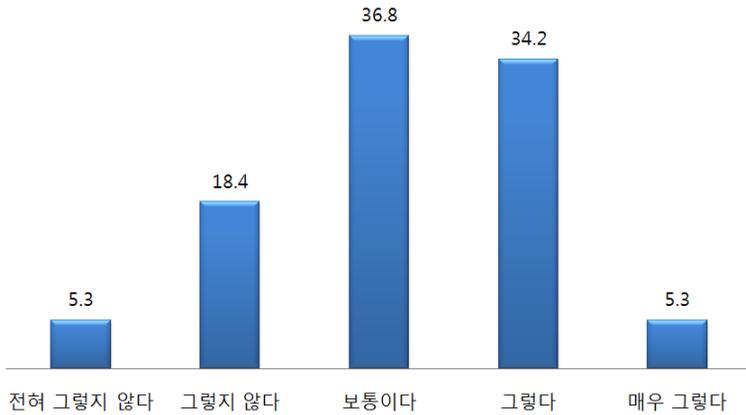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5개 선택지를 제시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3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렇다’가 34.2%로 그 뒤를 이었다.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18.4%의 비율을 보였으며, ‘매우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5.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해 중간 이상의 평가를 내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문가들이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에 대해 중간 이하의 평가를 내린 것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결과이다. 특기할 점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평가에 있어 한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의 평가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전문가들이 오히려 한국 전문가들에 비해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전문가들의 경우 20명 중 12명이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20명 중 17명이 보통 이상의 평가를 해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그림 II-15〉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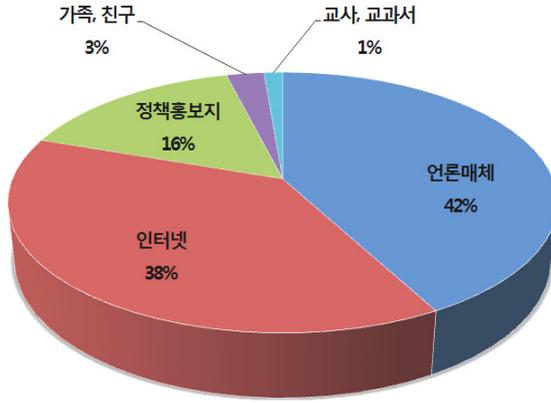
둘째,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주로 어떤 통로를 통해 접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다. ‘언론 매체,’ ‘인터넷,’ ‘정책 홍보지,’ ‘가족/친구,’ ‘교사/교과서’의 5개 선택지를 제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은 주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내용을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언론 매체’라는 응답이 42%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이 38%로 그 뒤를 이었다. ‘정책홍보지’라는 응답은 16%였으며, 나머지는 ‘가족/친구’가 3%, ‘교사/교과서’가 1%의 비율을 보였다.

I

II

III

〈그림 II-16〉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접한 경로



셋째, 중국인들의 한반도 인식과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이다. 한국이 추진하는 통일공공외교가 중국인들이 한반도 상황과 한반도 통일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에서 ‘매우 도움을 주었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가토록 한 결과, ‘매우 도움을 주었다’는 응답이 45.8%로 가장 많았다. ‘조금 도움을 주었다’와 ‘도움을 주지 않았다’가 각각 20.8%의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가 8.3%, ‘잘 모르겠다’가 4.3%의 비율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중국인들의 한반도 실태 및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문항에 대한 국적별 응답 비율 역시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났다.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 전문가에 비해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중국인들의 한반도 인식에 도움을 주었다고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한 비중이 중국 인사는 20명 중 14명 (무응답 2명 제외)에 달했고, 한국 인사는 20명 중 9명에 불과했다. 이는 중국 측 전문가들이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 -17〉 중국인들의 한반도 인식과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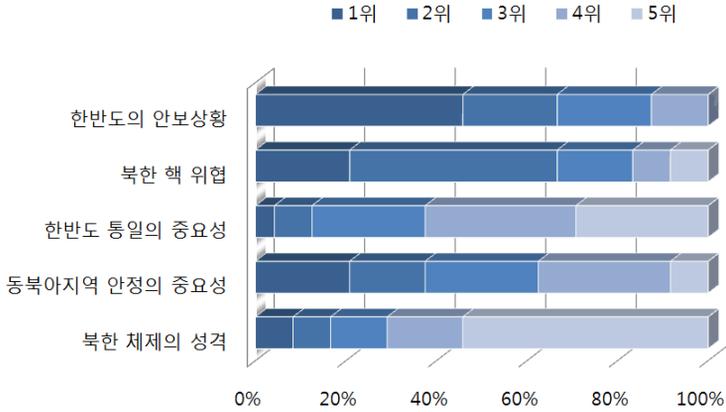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다’고 답변한 긍정적 평가 대상자를 상대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중국인들로 하여금 어떠한 부분에서 인식을 제고하게 했는지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예시로 ‘한반도의 안보 상황,’ ‘북한 핵 위협,’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 ‘동북아 지역 안정의 중요성,’ ‘북한 체제의 성격’이라는 5개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시에 대해 중요도 순으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순위는 1위 ‘한반도의 안보상황,’ 2위 ‘북한 핵 위협,’ 3위 ‘동북아 지역 안정의 중요성,’ 4위는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체제의 성격’이 가장 낮은 5위를 기록했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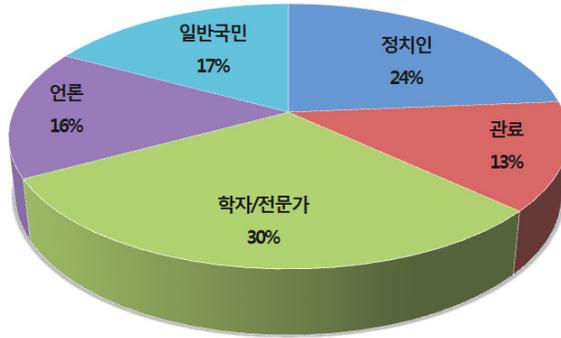
III

〈그림 II-18〉 중국인들의 한반도 인식에 도움을 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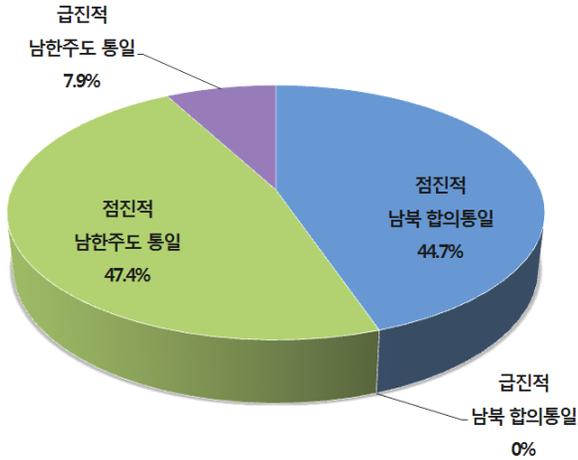
넷째, 중국인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주된 대상이 누가되어야 한다는 질문이다. ‘정치인,’ ‘관료,’ ‘학자/전문가,’ ‘언론,’ ‘일반 국민’이라는 5개 선택지를 제시한 후, 중요도에 따라 2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은 여론을 주도하는 학자/전문가 집단, 주요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치인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학자/전문가’가 30%로 가장 높은 순위를 나타냈고, 그 뒤를 이어 ‘정치인’ 24%, ‘일반 국민’이 17%, ‘언론’이 16%를 기록했다. ‘관료’는 가장 낮은 13%의 응답률을 보였다. 아마도 관료들은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지만, 자신의 생각보다는 정부의 정책노선을 그대로 이행하는 수동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19〉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대상



다섯째,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전제한 한반도 통일 형태에 대한 질문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어떠한 형태의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점진적 남한주도 통일’이라는 응답이 47.4%, ‘점진적 남북 합의통일’이라는 응답이 44.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급진적 남한주도 통일’은 가장 낮은 0%를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점진적 남한주도 통일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는 것이다(미국 81%, 일본 62%, 러시아 70%).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중국인 전문가들에게 북한에 대한 호의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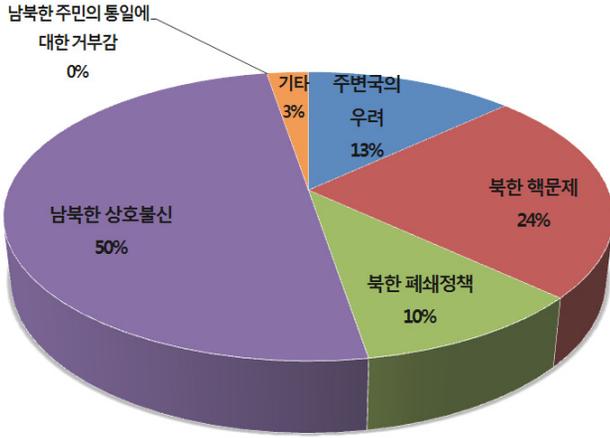
〈그림 II-20〉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전제한 한반도 통일 형태



여섯째,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에 대한 질문이다. 한국이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상호불신’이라는 응답이 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북한 핵 문제’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주변국의 우려 13%, ‘북한 폐쇄정책’이라는 응답은 10%를 기록했으며, 그 나머지로 ‘기타’가 3%를 각각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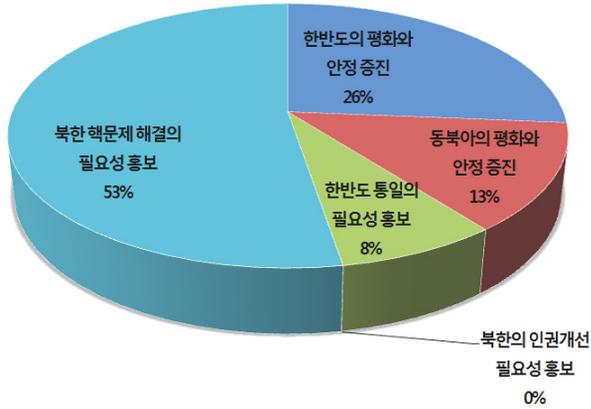
특이한 점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남북한 상호불신’의 응답이 특별히 높게 측정되었다는 것이다(미국 23%, 일본 38%, 러시아 38%). 이는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 북핵문제보다 남북문제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I-21〉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



일곱째,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분야에 관한 질문이다.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가 어느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이는 한국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그동안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증진에 대한 공공외교 노력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결과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 홍보’가 5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이 26%로 그 뒤를 이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이 13%를 기록하였으며,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홍보’는 가장 낮은 8%의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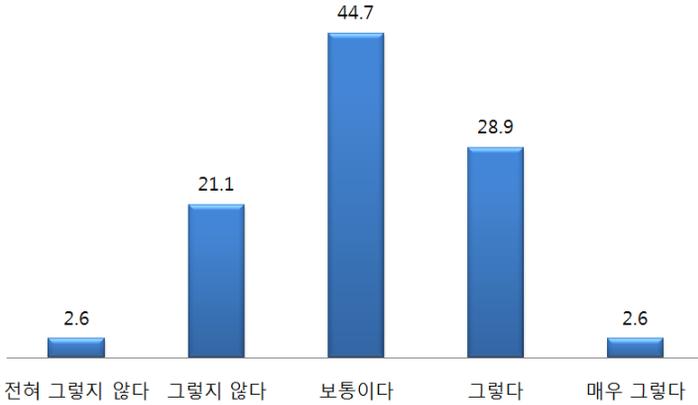
〈그림 II-22〉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분야



여덟째,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인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다. 위의 3번째 중국인들의 한반도 인식과 통일공공외교 연관성에 대한 질문과는 달리, 이번 질문은 통일공공외교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이 한반도 통일에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질문한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로 평가토록 한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28.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가 21.1%를 기록했다. ‘매우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가 각각 2.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중국인들의 한반도 인식을 제고했다는 상위 질문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국인들의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 질문에 비해 긍정적 비율이 낮기 때문에 통일공공외교가 중국인들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인식이나 행동의 실질적 변화까지는 아직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II-23〉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인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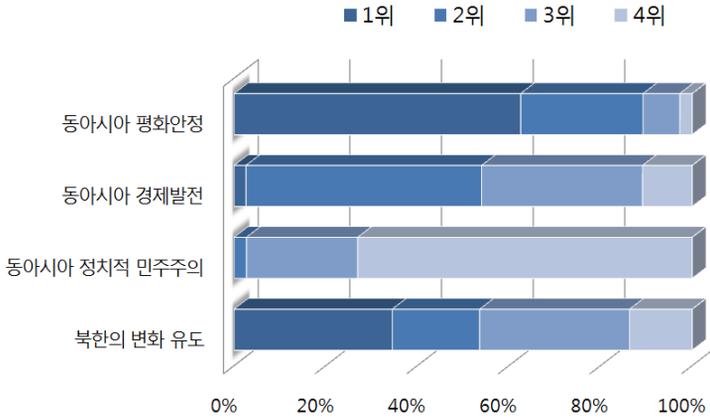
아홉째,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중점 분야에 대한 질문이다. 전문가들에게 ‘동아시아 평화·안정,’ ‘동아시아 경제 발전,’ ‘동아시아의 정치적 민주주의,’ ‘북한의 변화 유도’라는 4개 선택지를 제시한 후, 한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동아시아 평화·안정’이 1위를, 2위는 ‘북한의 변화 유도,’ 3위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4위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민주주의’에 돌아갔다. 결과를 볼 때,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 일단 한반도 주변 즉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북한의 변화 유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경우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북한의 도발 억제 외에도 주변국들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환경 조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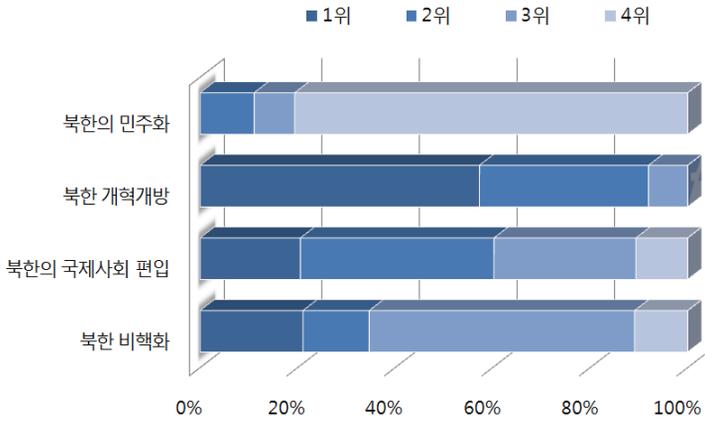
III

〈그림 II-24〉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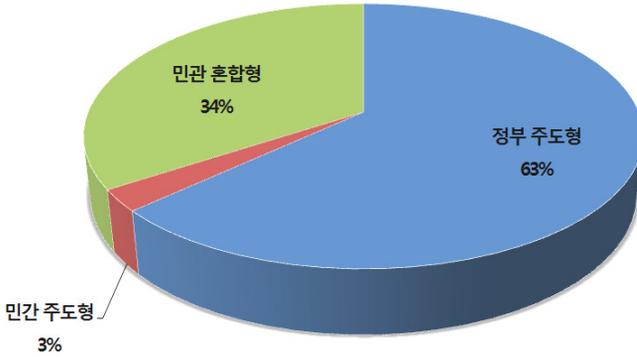
열 번째,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정책에 관한 질문이다. 북한에 포커스를 두고 ‘북한의 민주화,’ ‘북한의 개혁·개방,’ ‘북한의 국제사회에의 편입,’ ‘북한의 비핵화’라는 4개 선택지를 제시한 후,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추진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이 1위를 차지하였다. 2위는 ‘북한의 국제 사회 편입,’ 3위는 ‘북한 비핵화,’ 4위는 ‘북한의 민주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보다 개혁·개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II-25〉 북한 변화 유도를 위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정책



열한 번째,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결과는 ‘정부 주도형’이라는 응답이 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민·관 혼합형’이라는 응답이 34%의 비율로 나타났다. ‘민간 주도형’은 가장 낮은 3%의 비율을 보였다. 이 결과는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에 대한 질문과 비슷하게 한국의 공공외교, 통일공공외교 모두 정부 주도 비율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통일공공외교는 공공외교 일반과 비교해서 정부의 역할 비중이 약간 더 높다고 인식되었다. 이는 통일이라는 이슈가 공공외교 일반의 이슈보다 보다 전문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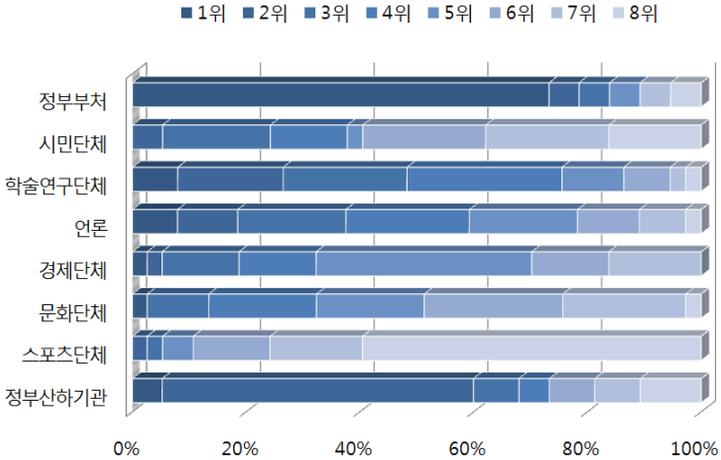
〈그림 II-26〉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체계의 특징



열두 번째,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핵심 주체를 알기 위한 질문이다.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 정부산하기관이라는 8개 선택지를 제시한 후, 이 중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핵심적인 담당기관 및 주체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정부부처’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정부산하기관,’ 3위는 ‘학술연구단체,’ 4위는 ‘언론,’ 5위는 ‘경제단체’로 나타났다. ‘문화단체’는 6위, ‘시민단체’는 7위를 기록했으며, ‘스포츠단체’가 가장 낮은 8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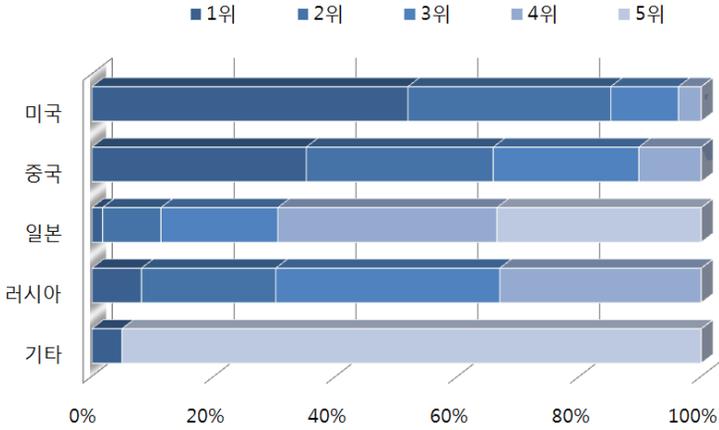
이 결과는 한국 공공외교 일반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학술연구단체의 순위가 5위에서 3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분야가 일반 공공외교에 비해 접근성과 보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한 학계의 역할을 중요하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27〉 한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핵심 주체



열세 번째,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우호적인 국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기타의 5개 선택지를 제시한 후, 통일공공외교를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국가가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긍정적 태도의 강도에 기초하여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를 각각 기록했으며, ‘일본’은 4위, ‘기타’는 5위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 조사는 중국을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가장 긍정적이지 않은 국가로 선정한 것을 볼 때, 이 문항에 대한 국가별 전문가들의 인식 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28〉 한국 통일공공외교에 긍정적인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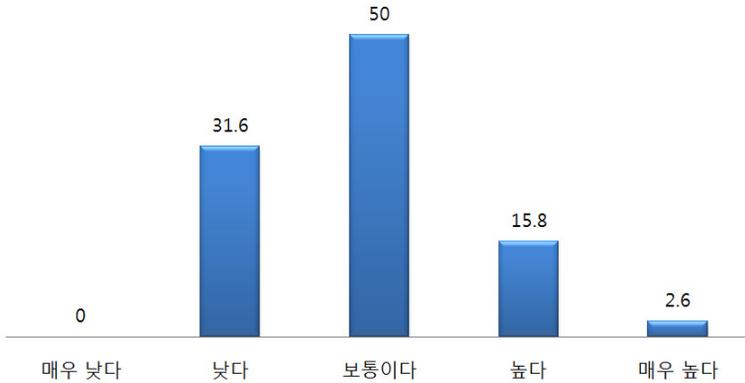
열네 번째, 한국의 통일공공외교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적인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평가와 역대 정부별 평가로 구분해 질문하였다. 우선, 한국이 지난 15년간 추진해 온 통일공공외교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하였다. ‘매우 낮다’부터 ‘매우 높다’까지의 5점 척도를 제시한 후, 해당 점수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가 5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낮다’가 31.6%, ‘높다’가 15.8%를 기록하였으며, ‘매우 높다’라는 응답은 가장 낮은 2.6%의 비율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보통 이하의 평가를 내렸다.

이어,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제시한 후, 역대 정부별 한반도 통일공공외교의 성과를 평가토록 하였다. 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5점 척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높다’가 42.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뒤를 ‘보통이다’가 31.6%, ‘매우 높다’가 13.2%를 각각 차지하였다. ‘매우 낮다’는 응답은 7.9%, ‘낮다’는 응답은 5.3%로 나타났다. 한편, 이명박 정부에서는 ‘낮다’가 44.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매우 낮다’가 28.9%, ‘보통이다’가 23.7%로 그 뒤를

이었다. ‘높다’는 응답은 가장 낮은 2.6%의 비율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확연하게 통일공공외교에 있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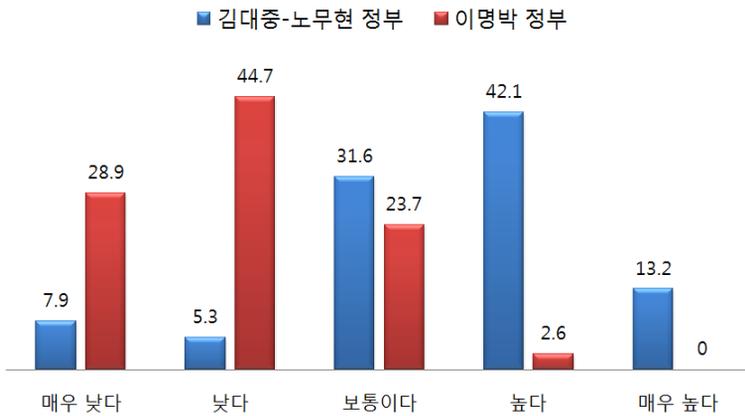
〈그림 II-29〉 지난 15년간 한국 통일공공외교 성과

(단위: %)



〈그림 II-30〉 정부별 한국 통일공공외교 성과

(단위: %)



I

II

III

(3) 한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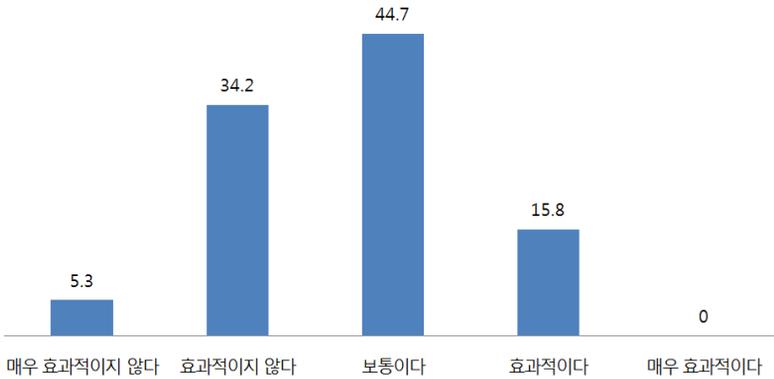
3부는 한국의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북핵과 관련한 이슈들에 집중하였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의 북핵 해결 노력,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목표와 성과, 추진체계 등을 전문가들에게 질의하였다. 또한 한국이 북핵 관련 공공외교를 통해 중국인들의 인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실제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평가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 및 민간 모두 포함)의 외교적 노력들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효과적이지 않다’가 34.2%로 나타났다. ‘효과적이다’라는 응답은 15.8%, ‘매우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응답은 5.3%로 각각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보통 이하로 평가했는데, 이는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것은 국적별 응답의 차이이다. 중국인 전문가들이 오히려 한국인 전문가들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중국인 전문가 20명중 16명(미응답 2명)이 한국의 노력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 한국인 전문가들은 20명 중 13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는 북핵문제 해결에 당사국인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현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II-3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 평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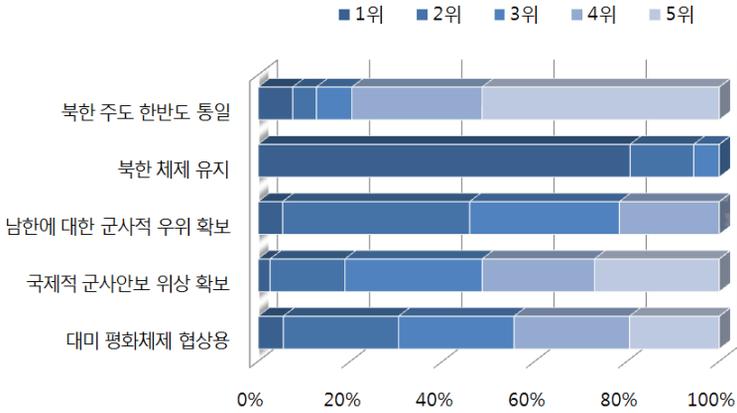
둘째, 북한의 핵개발 의도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중국 내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과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의 북핵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 ‘북한체제 유지,’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 ‘국제적 군사안보 위상 확보,’ ‘대미 평화체제 협상용’이라는 5개 선택지를 제시한 후, 이 중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북한 체제 유지’가 1위로 나타났고, 2위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보,’ 3위는 ‘대미 평화체제 협상용,’ 4위는 ‘국제적 군사안보 위상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도 한반도 통일’은 가장 낮은 5위를 차지하였다.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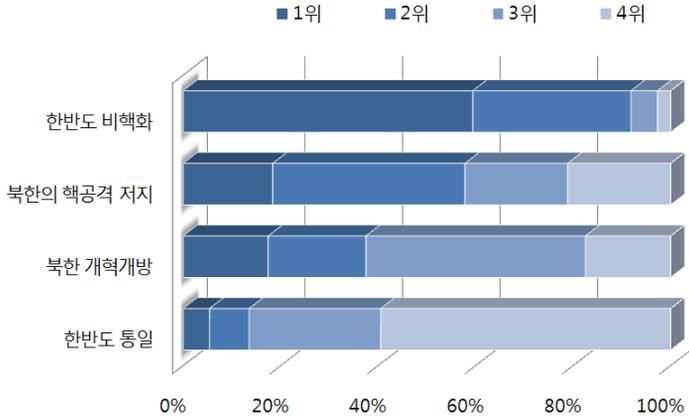
III

〈그림 II-32〉 북한의 핵개발 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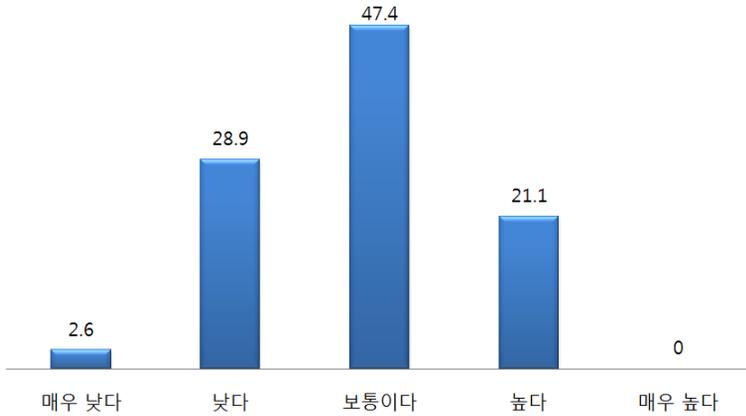
셋째,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목표를 파악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공격 저지,’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이라는 4개 선택지를 제시하였다.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한반도 비핵화’가 1위를, ‘북한의 핵공격 저지’가 2위, ‘북한 개혁개방’이 3위로 각각 나타났다. ‘한반도 통일’은 가장 낮은 4위를 차지하였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단 한반도의 비핵화를 당면목표로 설정하고 북핵 관련 공공외교를 추구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33〉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추구하는 목표



넷째,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중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이다. ‘매우 낮다’부터 ‘매우 높다’까지의 5점 척도를 제시하고 해당점수에 표시토록 한 결과, ‘보통이다’가 47.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낮다’는 28.9%, ‘높다’는 21.1%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매우 낮다’는 2.6%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對중국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중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보통 이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림 II-34〉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중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이어서 왜 전문가들의 그러한 평가를 하게 되었는지의 이유를 묻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우선 영향력이 낮다고 평가한 이유이다. 3개 선택지를 제시하고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 노력 부족’이 1위를, ‘중국인들의 무관심’이 2위로 그 뒤를 이었으며, ‘북한 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성 부재’가 가장 낮은 3위를 기록했다. 반면,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3개 선택지를 제시하고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한 결과, 1위는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북핵 관련 공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북핵 관련 한국 외교의 일관적 추진’이었으며,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의 효과적 추진’은 가장 낮은 3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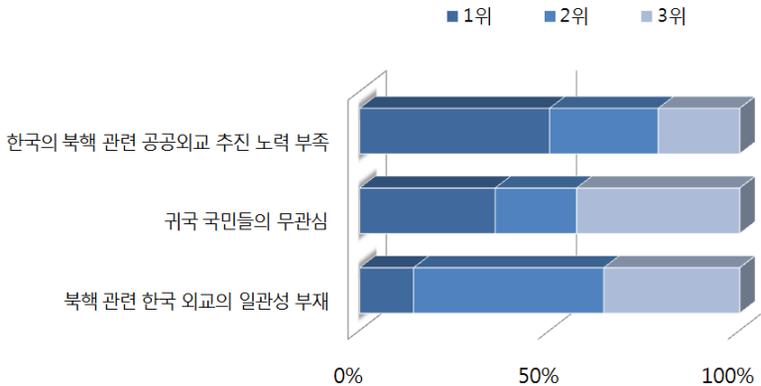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對중국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효과 및 영향력을 긍정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북핵문제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지역 및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일국의 외교적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북핵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영향력이 중국 대중들에게까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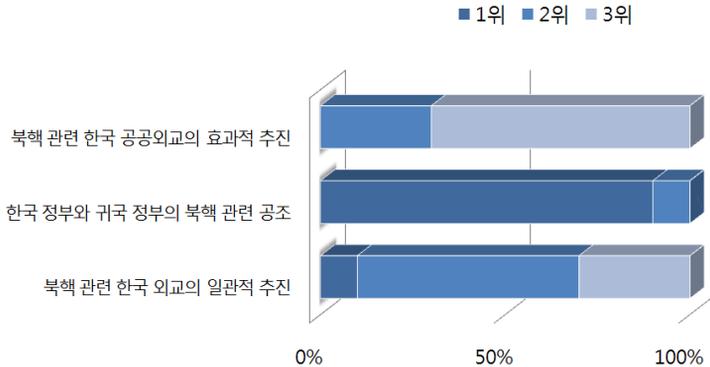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평가의 이유를 분석해 보면,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당한 비율이 중국인들의 무관심을 주요 이유로 꼽고 있어서 향후 공공외교의 노력에 따라 중국인들의 관심도가 제고된다면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긍정적 평가의 이유에서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의 핵관련 공조가 1위로 나타난 것 역시 고무적인 결과이다. 최근 한-중 양국관계가 호전되고,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진전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긍정적 전개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그림 II-35〉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중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낮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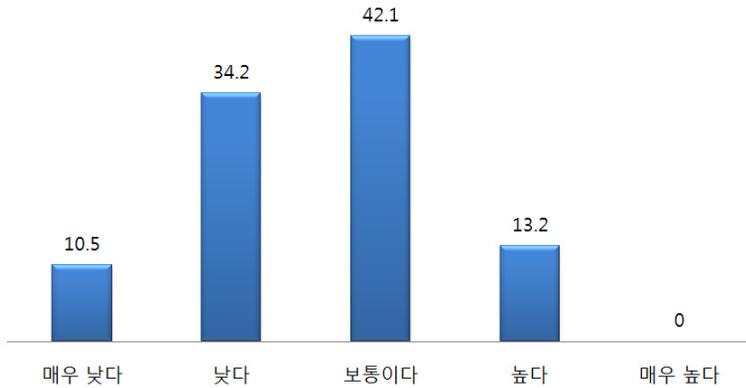
〈그림 II-36〉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중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높은 이유



다섯째, 중국의 북핵 정책 결정에 있어 대중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북핵 정책을 수행할 때 대중 여론을 얼마나 수렴하는지를 파악하고, 만일 여론의 영향력이 강하다면,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효용성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북핵 정책 추진에 있어 중국 대중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청취·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매우 낮다’부터 ‘매우 높다’까지 5점 척도를 제시하고 해당 점수에 표시토록 한 결과, ‘보통이다’가 4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낮다’가 34.2%로 그 뒤를 이었으며, ‘높다’는 13.2%, ‘매우 낮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10.5%의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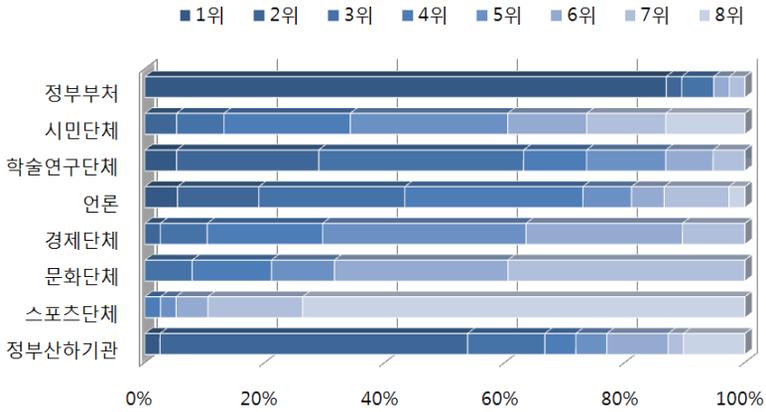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핵 정책 결정에 있어 대중 여론의 영향력은 보통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중국체제 및 사회의 민주화, 다원화 수준이 낮기 때문에 대중 및 여론의 영향력이 대외정책 결정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37〉 북핵 정책 수행 시, 중국 정부의 국민 여론 수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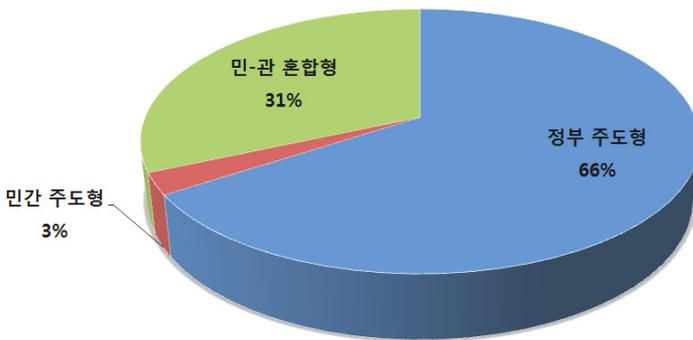
여섯째,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추진 주체에 대한 질문이다. 공공외교 일반, 통일공공외교와 마찬가지로 정부부처, 시민단체, 학술연구단체, 언론, 경제단체, 문화단체, 스포츠단체,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선택지를 제시하고, 중요도에 따라 순위를 기입토록 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핵심 주체로 ‘정부부처’를 1위로, ‘정부산하기관’은 2위, ‘학술연구단체’는 3위, ‘언론’은 4위로 선택했다. ‘경제단체’가 5위, ‘시민단체’가 6위를, ‘문화단체’와 ‘스포츠단체’는 각각 7위와 8위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공공외교의 핵심 주체에 대한 문항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핵이 비대증적, 비보편적 이슈이기 때문에 학술연구단체가 공공외교 일반의 핵심 주체와 비교해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I-38〉 북핵 관련 한국 공공외교 추진 주체



일곱째,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 특징에 관한 질문이다. 이 역시 위의 공공외교 일반,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체계 특징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공외교 전반을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정부 주도형’이라는 응답이 6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민·관 혼합형’이라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민간 주도형’은 가장 낮은 3%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림 II-39〉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 추진체계 특징



다. 전문가 인식의 특징

중국 전문가 4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의 공공외교, 통일공공외교, 북핵 관련 공공외교에 대한 인식에 있어 유의미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공공외교 일반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공공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한국이 공공외교 전반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다고는 하나, 전문가들이 보기에 특히 중국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외교가 미흡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는 일반적인 공공외교 목표와 마찬가지로 국가위상 제고, 국가 이미지 개선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었으며, 한반도 통일은 그 중요도가 낮게 책정되었다. 한국 공공외교의 추진체계의 경우, 전문가들은 공공외교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강하다고 인식하는 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 역시 정부부처나 정부 관련 기관으로 보고 있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의 경우, 문화·예술이 1위로 나타났으며, 주요 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중국의 경우 한류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국 전문가들에게 중국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공공외교는 곧 문화외교라는 인식이 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에 있어 경제적 기여가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은 공적개발원조(ODA) 확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인식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국이 추진 중인 공공외교 프로그램의 비중(중요도)에 대해서는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2년 중국의 공공외교에 대한 조사에서는 실업계 대상 프로그램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선택되었는데, 이에 비해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일반인 대상이 선택된 것은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수단으로 문화예술 콘텐츠(한류 포

I

II

III

함) 및 ODA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연관이 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평가 및 인식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에 대해 중간 이상의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특징은 중국인 전문가들이 한국인 전문가들보다 더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점이다. 물론 중국의 공공외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도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상대국 국민의 인식 변화 및 통일관련 정보의 확산 등을 포함한다고 할 때, 중국인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면,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향후 행보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주로 언론매체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었으며, 이는 중국 내 언론 및 인터넷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해 보았을 때, 중국 대중들에게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중국인들의 한반도 실태 및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평가와 마찬가지로 영향력에 대해 중국인 전문가들이 한국인 전문가들에 비해 평가가 더 긍정적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노력 여하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영향력은 더욱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분석 결과, 중국인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핵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한반도 안보나 북핵문제에 비해 한반도 통일 문제의 중요성이 낮은 순위를 차지해 아직까지 통일 논의를 중국인들에게 확산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중국인들의 한반도 통일관련 이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인식과 행동의 변화까지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영향력

이 중국인들의 인식변화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의 통일 공공외교가 향후 중국 내 여론 확대를 위해 학자/전문가 집단과 실질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공략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국이 통일공공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 남북한 상호 불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 결과는 다른 국가들의 응답 비율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치이다. 아마도 중국인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 북핵보다 남북관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특징으로 파악된다.⁷⁶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북한의 변화 유도보다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를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우호적인 국가에 대한 질문의 경우,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을 2위로 선정해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미국과 일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중국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본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이는 전체적으로 자국 혹은 연구대상 국가에 호의적인 전문가들의 성향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미국과 일본이 일본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본 반면, 중국과 러시아 측은 일본의 역할을 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전문가들은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에 있어 김대중·노무현

⁷⁶ 이와 비슷한 경향은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전제한 한반도 통일 형태에서 점진적 남한 주도 통일에 대한 응답률이 낮은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위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분석 참조.

정부 때에 비해 이명박 정부의 성과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한·중관계가 악화된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의 통일관련 공공외교로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보통 이하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국적별 비교 분석에서는 중국인 전문가들이 한국인 전문가들 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인식이 이처럼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북핵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이 일반 중국인들에게까지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도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가 중국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질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핵문제가 단순히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동북아 및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일국의 외교적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국의 경우 북핵 해결 방법론에 대한 인식이 한국 혹은 다른 국가들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북핵 관련 공공외교의 영향력이 중국 대중들에게까지 긍정적 효과를 발휘한다고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내 언론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북핵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높아져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제고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핵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 중국의 여론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중국 내 언론의 변화를 통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가늠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III

결론: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에
주는 시사점

1. 한국의 對중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 평가

이상에서 본 연구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통일외교와 통일(관련)공공외교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특히 통일공공외교 실태는 공공외교의 실행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핵심 구성요소에 주목한 5단계의 분석틀을 원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통일공공외교의 목표→주체→자산과 자원→매체→대상이 그것이다. 특히, 정부 차원의 통일공공외교 수행 체계와 자원 및 자산에 따른 공공외교의 영역에 초점을 두어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수행체계 및 실태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및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수행 체계와 영역별 추진실태에 관해 평가하고자 한다.

가.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평가

중국 정부는 수교 이후 줄곧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교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의 부상과정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진행될수록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북한 껌안기’를 지속해오면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2013년 2월 3차 북핵 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제재가 이전보다 강화되는 변화를 보였지만, 이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다기보다 북한을 대화의 장인 6자회담으로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평가된다. 즉,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및 한반도의 안정관리가 여전히 우선적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중관계는 수교와 동시에 북핵문제가 지배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통일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외교는 북핵문제 해결, 탈북

I

II

III

자 문제 등에 집중되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등장이후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이견이 노골화되면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중 양국 간 협력은 더욱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중 간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하면 할수록 오히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의 부상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국은 가능한 한반도를 포함한 주변 정세의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있어 한반도 통일과 같은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부상에 따라 미·중 간의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한국은 한미동맹을 유지, 또는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협력을 얻어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對중국 통일외교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현시점에서는 직접적인 통일외교를 전개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 하에 점진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확장시켜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행인 점은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기대가 증대함에 따라 한·중 간 협력할 수 있는 공간도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공공외교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도 개최된 바 있다. 따라서 중국의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는 통일외교와 공공외교의 방식을 접맥시킬 수 있는 환경은 초보적이거나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나.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평가

(1)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체계

한국의 對중국 통일관련 공공외교 전반에 나타난 특징은 수행 체계의 미비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공공외교의 목표 설정에서부터 수행 주체 및 자원 간 상호관계가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연계되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물론 이점은 우리의 공공외교 추진체계가 아직 초보적이고 현재 진화 중이라는 이유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우리의 공공외교는 2010년 이후에서야 정책과 조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2010년 5월, 외교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에 ‘한국공공외교포럼’을 창설한 데 이어, 2011년 9월 공공외교 대사직을 신설하고, 2012년 1월 문화외교국 산하의 문화외교정책과를 공공외교정책과로 개정하는 등, 공공외교의 의제를 확장하고 정책적 포괄성을 강화하고 있다.

〈표 Ⅲ-1〉 한국 공공외교의 정책적 내용 변화

	정책개념	정책목표	정책내용
2009년 이전	문화외교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글로벌 이슈 관련 문화교류 -유네스코 외교강화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사업
		문화를 통한 국가 간 소통강화	-쌍방향 문화교류사업 -해외 공연, 전시, 영화제 개최 -문화공동위 및 문화국장회의 운영 -한·중·일 문화서틀 사업
		민간분야 문화외교 활성화	-사이버 아트 갤러리 활성화 -문화외교 인터넷 카페 개설 -직원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문화경쟁력 강화	-문화 콘텐츠 수출지원 -스포츠외교 -해외 한국학 연구지원 및 한국어 보급 -지자체 국제화 지원

I

II

III

	정책개념	정책목표	정책내용
2010년	문화외교	공공외교 추진	-공공외교 포럼 출범 -민간 법인, 단체 활동 지원 -재외예술인 활용 문화외교
		문화를 통한 국가 간 소통 강화	-전년도와 동일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국가브랜드 가치 고양	-재외공관의 한식세계화 기여
2011년	공공외교	공공외교	-공공외교 강화(포럼, 대사, 직제개편 등)
		문화를 통한 국가 간 소통 강화	-전년도와 동일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국가브랜드 가치 고양	-전년도와 동일

출처: 외교통상부, 『2009년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9 ; 외교통상부, 『2010년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10 ; 외교통상부, 『2011년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11 ; 외교통상부, 『2012년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12를 참조하여 작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공외교는 여전히 문화외교의 하위에서 운용되고 있고,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전략과 비전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수행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고 특성에 맞춘 명확한 목표 설정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책연구원, 학계와 민간단체 등 각 행위 주체와 기관들은 자체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으며, 개별적 성과도 적지 않게 거두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의 목표에서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개별적 추진에 따른 일관성이 부재함으로써 투입된 노력에 비해 효율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된 이유는 국가 이미지 강화라는 공공외교의 목표 의식이 없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전통외교의 목표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통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데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강화하려는 통일외교의 맥락에서 통일공공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한류로 대표되는 연성권력을 중국에 투사함으로써 국가 이미지(예컨대 평화)를 확산시켜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보다 경제 수익구조의 확대에만 주력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한 공공외교적 접근이라는 전략적 관점을 중국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한 목표의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내 ‘통일부담론’을 약화시키고 ‘통일편익론’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담론과 북한(핵)으로부터의 위협과 한미동맹의 당위성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를 중국에 이해시키고 한·중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역사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부 및 지식외교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경험을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목표에 투영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수행 체계에서 두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특징은 통일공공외교의 추진 주체 간 네트워크나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체는 중앙정부 및 산하기관, 지방정부, 국회, 국책연구원, 학계 및 언론계, 민간단체와 해외한인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공공외교에서 분산성과 중복성의 특징과 연결된다. 물론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공공외교의 특성을 수용한다 해도, 이러한 특징은 추진과정에서 낭비와 비효율성을 낳고 성과를 거두는데도 한계로 작용한다.

공공외교의 특성상, 중앙집중적일 수 없고, 분산화된 공공외교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수행체제는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다. 즉, 각 주체 간 통합적

목표와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으며, 주체별로 추진영역 및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효과성과 내부의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하거나 각 주체 간 상호 협조와 조율이 가능한 네트워크 형성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점은 향후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체계의 정비와 개선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수행체계의 미비는 효과적인 통일공공외교의 자산, 매체, 대상의 발굴 및 활용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외교와 공공외교의 접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는 지식 및 인적자산을 중심으로 회의체와 인적교류,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의 여론주도층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통일외교와 공공외교의 접목이 비교적 용이한 부분이기도 하며, 일당 독재의 권위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언론 및 SNS 등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환경의 반작용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관련 우리의 강점인 지식 및 인적자산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 활용이 기대되는 측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지식 및 인적자산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로 상징되는 문화자산과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경험 및 IT 강국으로서 미디어매체 등에서 강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이 통일관련 공공외교로 효과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접근으로 중국인의 혐한 감정을 부추기는 역효과 또는 부작용마저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통일관련 자산의 부족한 개발 및 활용은 한국의 對중국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콘텐츠가 빈약함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성과를 제한한다. 또한 추진대상에 있어서도 중국 정부와 국민, 중국 내 지역과 이슈 차원으로 분류한 접근 방법 및 접촉 방식을 개발하려는 탄력성

과 유연성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 평화·경제발전·문화·대북정책 및 통일방식 등 통일관련 콘텐츠와 공공외교를 결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2)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영역별 추진실태

한국 공공외교의 영역은 지식외교, 문화외교, 한국학외교, 미디어외교, 기업외교, 스포츠외교, 관광외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추진은 영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기업외교, 스포츠외교, 관광외교의 경우는 통일에 관한 상대국 정부나 국민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그 속성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업은 기업이미지의 제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시키는데 통일문제를 활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이 해당국 국민과 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과 동시에 교류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에서 한국기업이 통일공공외교의 수행자로서 역할을 발휘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남·북·중 3국 협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관련 활동은 한반도의 평화협력 및 화해 분위기 조성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넓은 의미에서 통일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단둥시 인근에서 북한 노동자가 참여하는 수제화 공장이 운영된 사례와 포스코가 북한의 광산자원에 관심을 두고 중국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 창출되어야 하는 부담과 대북제재 등 국제정치안보적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미 있는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스포츠와 관광외교의 경우는 통일공공외교의 의미 있는 콘텐츠와 효용성을 갖고 있다. 즉, 스포츠의 경우,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은 국명

을 KOREA, 국기는 한반도기, 국가를 아리랑으로 합의하고 동시 입장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후 남북한 동시 입장은 부산 아시안게임(2002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03년), 아테네 올림픽(04년), 마카오 동아시아게임(05년), 토리노 동계올림픽(06년)까지 이어졌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화해 분위기 조성과 남북한이 하나임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한 통일공공외교로서 효과적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이러한 스포츠외교는 공교롭게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남북관계의 악화에 따라 2008년 북경 올림픽에 남북한 동시 입장이 무산된바 있고, 오히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예선을 제3국인 중국에서 개최함으로써, 남북갈등과 대결 구도만 국제사회에 부각된 측면도 있었다. 이처럼 중국에 대한 스포츠 영역에서의 통일공공외교 추진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약이 뒤따른다고 평가된다.

관광외교의 경우, 남북관계의 현장을 접할 수 있는 판문점인 DMZ 관광 등이 상품으로 개발되어 있다. 이는 해외 관광객에게 한반도의 현실을 이해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통일공공외교에 속한다고 평가된다. 특히, DMZ 생태평화공원의 경우, 남북협력,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상징성이 있어 향후 개발 여지는 풍부하다고 평가된다. 경기도에서 2012년부터 중국 관광객 유치에 위한 판문점 및 DMZ 상품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판문점 관광에서 중국은 방문 제한국에 해당되며, 북한을 경유한 중국인의 판문점 관광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통일공공외교로서 기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들을 겨냥한 통일관련 관광 상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류를 활용한 관광수익 창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관광을 통한 통일공공외교의 추진은 미진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영역별 추진은 지식외교와 문화외교, 한국학외교, 미디어외교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으로 평가된다. 통일 문제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는 지식외교와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외교, 그리고 IT강국으로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미디어외교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어왔다. 다만, 한국학외교는 지식 및 문화외교에 중첩되는 측면이 있어 여기에 포함했다.

다음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한 영역별 추진 실태에서 나타난 특징을 평가하고자 한다. 평가의 주요 내용은 중국에 대한 한국의 통일관련 지식외교가 내용과 이슈의 측면에서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요 주체와 대상은 누구이고, 어떠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목표 대상 그룹이나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있는가 등이다.

우선, 한국의 對중국 통일관련 지식외교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지식외교의 수행에는 남북분단의 역사, 현실, 국제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북핵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은 물론, 1.5트랙 및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한 공공외교를 수행해왔다고 평가된다. 우리의 현실과 미래에 직접적이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통일문제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의 이해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도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반도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통일연구원의 존재도 그렇다. 이 점은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를 펼치는데, 지속적으로 강화·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기도 하다.

지식외교의 특성상, 한국의 對중국 통일관련 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은 중국 내 한반도 및 국제관계 전문가와 언론계 등 주로 여론주도층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과 이슈는 북한 및 북핵문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한·중, 북·중관계 등이며, 주요 수단은 학술회의, 좌담회, 세미나, 한반

도 통일관련 연구지원 등이 활용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2013년 9월 한·중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중국공공외교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한·중 공공외교포럼이 최초로 개최되어, 공공외교협력 방안 건의문이 채택되었다는 점은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의 쾌거라 할 수 있다.⁷⁷ 이러한 활동은 한반도 통일관련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파악하려는 측면에서 시도되었지만,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중국에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기할 만한 것은 통일문제 관련 한·중 학자 간 공동연구와 연구결과의 중문판 발간이 시도된 점을 들 수 있다.⁷⁸ 한반도 통일관련 연구에 대한 단순 지원보다 공동연구가 한·중 간 입장 차이를 좁히고 상호이해의 기반을 넓히는데 유리하며, 중국어본이 한글본보다 중국의 지식층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對중국 통일관련 지식외교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발견된다. 공공외교가 중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여론주도층을 주 대상으로 삼는 지식외교의 효과는 간접적이다. 물론 지식외교의 특성상, 중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여론주도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향력 있는 인사는 한정적이기에 주요 초청 및 지원 대상자가 계속 중첩되고 있으며, 지역도 북경 및 상해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북한체제의 붕괴, 탈북자 및 인권, 한국주도의 통일 등 중국이 북한 및 자국이익을

⁷⁷ 이 포럼을 통해 한·중은 매년 상대국을 오가며 연례적으로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청년교류사업 발굴 및 확대, 교육 협력 강화를 통한 양국 언어학습 기회 확대, 네티즌 및 언론인 간 교류사업 확대, 공공외교 연구기관 간 학술교류 강화 등 양국 간 공공외교 협력 방향에 관한 9개항의 대 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list/korboardlist.jsp?typeID=6&boardid=235&seqno=347293&c=TITLE&t=&pagenum=2&pc=&dc=&wc=&lu=&vu=&iu=&du=#>> (검색일: 2013.10.2).

⁷⁸ 대표적인 예로, 성균중국연구소에서 발간하는 『中國觀察』와 임강택·김철·만해봉, 『북한 변화를 위한 한·중협력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1)을 들 수 있다.

고려해 다루기 꺼려하는 주제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이었다. 향후 대상 및 논의 주제에 대한 발굴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둘째, 문화외교 추진실태에 관한 특징이다. 한국의 對중국 통일관련 문화외교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활동을 통해 추진된 사례가 극히 적고, 또 속성상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국은 한국과 문화 주권 및 역사 논쟁을 겪은 바 있고 또 소수민족의 통합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극할 수 있는 한민족·통일문화 행사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對중국 통일관련 문화외교의 주체는 민주평통과 한국국제교류재단, 민간 차원의 대학이나 재단 정도이다. 주요 대상도 중국 내 한국 교민이나 중국인 학자와 학생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학 학술대회와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통일관련 특강을 개최하거나, 이들을 초청하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분단현실이나 통일을 이해시키는 인적 교류에 주력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평가받는 문화를 통일문제와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부재한 실정이다. 통일 및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협력이 없고 최근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산된 한류를 활용한 전략과 콘텐츠도 부재한 실정이다.

셋째, 미디어외교의 추진실태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공공외교에서 미디어는 그 자체가 주체이자 대상이며 동시에 매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통일관련 한국의 對중국 미디어 외교의 주체는 언론재단이나 언론매체가 중심이고, 정부의 관련 부서는 보조적이다. 미디어외교의 대상은 중국의 주요 언론매체인 인민일보와 신화사 그리고 언론계 인사가 주류를 이룬다. 최근 중국 내 인터넷 인구나 영향력의 증가를 고려한 인터넷매체와 파워 블로거도 그 대상에 포함된 점은 고무적이다. 미디어를 통한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는 방송 프로그램의 송출·판매나 언론보도, 언론종사자나 파워 블로거를 초청하는 인적 교류의 형태로 추진되어왔다.

미디어가 일반 국민의 인식과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미디어를 통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핵 및 통일문제 관련 프로그램의 제작, 보급이 미진한 편이며, 중국어 방송도 제한적이다. 통일관련 내용 및 이슈 관련 프로그램의 전략적 발굴 및 다변화와 중국의 일반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도 필요한 실정이다. 매체 활용의 측면에서 한국의 對중국 통일관련 미디어외교는 신·구 미디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TV, 라디오, 신문 등 구미디어 중심에서 인터넷, 블로거, 트위터 등 신미디어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인터넷과 트위터, 페이스북 등 국민 여론에 깊숙이 파고드는 신미디어의 국제적 추세와 달리,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시행되고 있어 신미디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추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상의 영역별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추진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2〉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의 영역별 특징

	주제	활동내용(형태)	프로그램(매체)	대상
지식 외교	-외교부 등 정부, 국책연구원, 민간학계 등 주체의 다양성	-북핵문제, 동북아 및 한반도정세, 한·중관계 논의 등 중복성 -이슈(통일, 북한붕괴, 탈북자, 인권)의 다변화 필요	-협업체, 회의체, 포럼 등 인적교류 -공동연구 비활성화	-학자, 전문가 중심 -특정인사와 지역 편중
문화 외교	-문화부, 민주평통,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자산과 통일 이슈 연계 미비 -콘텐츠 부재	-통일강연, 청소년교류 -통일, 북한문제 관련 공연, 전시 부재	-학생 및 학자중심 -한류 활용한 일반 국민에 대한 접근 필요
미디어 외교	-언론매체, 외교부	-방송프로그램 제작, 송출, 판매 -인적교류	-구미디어 중심, -신미디어 활용에 제약	-언론매체와 인사

다. 전문가 인식조사의 특징

전문가 인식조사는 한국의 중국전문가와 중국인 전문가 각 2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조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각의 결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시킨 주된 이유는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객관적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였다. 즉, 한국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국인 전문가의 인식을 활용하는 한편, 대상국인 중국의 평가를 파악하기 위해 중국인 전문가의 인식을 함께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양국 전문가의 인식이 대동소이해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에 관한 양국 전문가 간 공감대가 일정 수준 형성되었다고 평가된다. 다만,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와 북핵 관련 통일공공외교의 효과에 대해서는 양국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통일공공외교의 주체인 한국의 전문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그 대상인 중국의 전문가들이 더 높게 평가하였는데, 본 조사는 이러한 견해를 종합함으로써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한국의 공공외교는 정부주도형으로서, 주요 행위자는 정부와 산하기관, 주요 자산 및 수단은 문화예술, 경제, 지식자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한국 공공외교의 주요 목표가 국가위상(34%), 국가 이미지 개선(22%), 안보이익(17%), 경제이익(15%)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한반도 통일은 가장 낮은 21%였다. 이 점은 한·중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공공외교에서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가 중시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공공외교에 관한 부정적 평가와 함께 통일공공외교의 위상이 낮음을 보여준다.

셋째, 전문가들은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에 대한 효과성 및 성과를 비교적 낮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보다는 비교적 높게 평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가 주변국에 대한 통일

공공외교보다 상대적으로 더 잘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표 Ⅲ-3〉 참조)

〈표 Ⅲ-3〉 지난 15년간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성과

(단위: %)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미 국	0	53.3	33.3	13.3	0
일 본	4.8	50	42.9	2.4	0
중 국	0	31.6	50	15.8	2.6
러시아	0	27	62.2	10.8	0

이와 관련,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성과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이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높게 평가되었는데, 이 점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점은 〈표 Ⅲ-4〉의 주변4국 전문가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중국 전문가의 평가가 가장 높다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에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했던 소위 햇볕정책이 이명박 정부 시기에 추진되었던 대북 압박정책보다 중국에서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결과로 평가되며, 남북교류협력 정책이 최소한 중국에서는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4〉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정부별 성과

(단위: %)

	정부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미 국	김대중-노무현	32	41.9	41.9	9.7	3.2
	이명박	9.7	45.2	29	16.1	0
일 본	김대중-노무현	9.5	21.4	35.7	33.3	0
	이명박	7.5	55	32.5	5	0

	정부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중 국	김대중-노무현	7.9	5.3	31.6	42.1	13.2
	이명박	28.9	44.7	23.7	2.6	0
러시아	김대중-노무현	0	10.8	56.8	27	5.4
	이명박	16.2	45.9	24.3	13.5	0

셋째, 북핵 관련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성과가 비교적 낮게 평가되었으며, 특히, 중국 국민들에 대한 영향이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로는 ‘한국의 노력 부족’과 ‘중국 국민의 무관심’ 순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국 국민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한국이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중국이 국민의 여론 수렴 및 정책 반영도가 낮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관련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보다 정교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對중국 한반도 통일(관련) 공공외교에의 시사점 및 과제

가.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입장과 정책 시사점 및 과제

한국주도의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가 다양한 한계와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앞에서 분석했다. 이러한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의 실태에 대한 분석은 한국주도의 통일에 중국의 협조를 획득할 수 있는 다음 몇 가지의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對중국 통일외교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통일의 교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대외전략 및 한반도정책에서 볼 때, 중국은 자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과의 경쟁 및 협력구

I

II

III

도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하며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한국주도의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물론 한반도의 통일환경 조성은 우리의 국력만으로 이루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주변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줄 이유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 스스로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질서가 갈등 및 대결 국면으로 전개되기보다 교류·협력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남북관계 개선 및 정상화와 국내의 통일 의지 결집과 여론 형성도 포함된다.

둘째,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통한 한·중 간 신뢰형성 및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현상 유지책을 사용하는데, 핵심적인 이유는 한미동맹과 북한에 대한 상호 인식과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연유된다. 비록 한·중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정치외교 관계 특히 안보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북한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와 인식의 차이를 노정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의 한계로 이어진다. 예를 들면, 미국의 對중국 견제를 우려하는 중국은 한미동맹을 미·중관계 속에서 접근하며 한국의 안보정책과 행보에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존재가치를 여전히 유효하게 평가하면서 한국주도의 통일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 상실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한국 역시 중국이 북한 편향적인 인식과 정책을 전개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추진에 있어 사실상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는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중국의 이해관계

와 직결되는 통일과 같은 한반도 현상 변경에 대한 중국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중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한·중 양국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표출되고 이로 인해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한·중 양국 관계 자체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한국이 對중국 통일외교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일외교에 공공외교를 접맥시키는 외교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통일외교는 정부 대 정부 차원에만 집중되어온 한계를 노정해왔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자국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딜레마가 있다. 일단 중국 역시 분단국이기 때문에 타국의 통일 노력을 공개적으로 폄하하거나 특히 반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수정시키고 중국 정부를 한국주도의 통일에 협조적으로 유인해내기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반도 통일에 대한 범민족적 의지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한반도 통일이 당위의 문제이고 대세라는 국내외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켜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국 내부의 다양한 대상들에게 한반도 통일 및 한국주도의 통일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정책을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차원의 통일외교에다 우리의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공공외교의 영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일과 결합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I

II

III

나.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체계와 실태, 시사점 및 과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수행체계와 영역별 추진실태에 관한 검토 결과는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통일관련 공공외교를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는 향후 우리의 효과적인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 및 과제를 동시에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고, 본 연구의 5단계 분석틀에 기초해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에 주는 시사점 및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목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조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획득할 수 있는 맞춤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비핵화를 통한 평화통일 실현은 우리의 핵심 외교 목표인 바, 이를 담아낼 수 있는 공공외교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후, 이를 다시 중국에 적용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목표를 수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을 상대로 한 통일공공외교의 핵심은 중국 정부 및 국민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주도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국민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갖고 있다. 앞서서도 분석했듯이, 중국 국민의 26.7%만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10.9%)하거나 지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50.5%)는 의견이 과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이 추진한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성공적 분야와 한반도 상황 인식 기여도에 관한 전문가 조사결과는 주목된다. 즉, 한국의 통일공공외교를 통한 중국인의 인식 제고 순위는 ‘한반도의 안보상황’, ‘북핵 위협’, ‘동북아 지역 안정의 중요성’에 이어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이 4위로 나타났고,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성공적 분야 역시

‘북핵문제 해결의 필요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증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이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이 4위에 기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결과는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방향이 중국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율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목표는 중국 내에 한반도 ‘통일부담론’을 완화시키고 ‘통일편익론’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⁷⁹

(2) 주체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주체는 외교부, 통일부 중심의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 국책연구원 중심의 1.5트랙과 학계 및 언론계 중심의 민간 차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각 주체 간 합의된 인식과 목표 및 정보에 대한 공유 없이 각각의 특성과 영역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는 주체별 중복투자와 산발적이고 분산적인 추진이란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공공외교의 특성상, 영역, 수단, 행위자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정부주도하의 민·관 혼합형에 가까운 한국의 공공외교 추진체계상 이러한 문제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과 정보를 둘러싼 부처 간 갈등이나 각 주체 간 경쟁은 효율적 성과를 제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통일이란 국가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

이는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각 주체들의

⁷⁹ 이에 대해서는 Jun Byoung-kon·Kim Jang-ho, “China’s Role and Perception of a Unifies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5, No. 3 (KIDA, September, 2013), p. 378.

역량을 집중시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목표에 부합하는 추진체계의 준비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 점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 공공외교가 외교의 종합적인 전략 및 비전과의 연계 속에서 각 주체의 활동과 영역을 조정할 수 있는 공공외교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구축을 요구한다. 그런 점에서, 컨트롤타워의 구축에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수행 주체는 외교부만이 아니라 다른 부처와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바, 외교부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추진하되, 별도의 독립적인 가칭 ‘통일공공외교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이다. 對중국 통일공공외교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공공외교의 맥락에서 국가의 외교 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외교의 인력과 기능,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외교부가 총괄·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⁸⁰ 다만, ‘통일’ 부문의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해, 통일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경험이 풍부한 통일부와 통일문제 전문 연구원인 통일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개방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3) 자원 및 자산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자원 및 자산은 제한적이다. 그나마 강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원 및 자산은 우리의 대북 및 통일 정책 관련 정보와 지식이다. 중국이 우리와 다소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

⁸⁰ 박철희, 『한국공공외교 추진체계 연구 및 전략수립』(한국국제교류재단 용역보고서, 2011), p. 15, <http://www.mofa.go.kr/mofat/htm/issue/servicereport_2.zip>.

으로 강화하고 활용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한 통일공공외교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중국의 특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게 가공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통일공공외교가 전제하는 한반도 통일 방식에 대한 주변4국의 전문가 조사에서 중국의 조사결과가 타국과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즉, 타국의 조사결과는 점진적 한국주도의 통일방식이 높게 나온 반면, 중국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점진적 남북합의 통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Ⅲ-5〉 한국 통일공공외교가 전제한 한반도 통일 형태

(단위: %)

	점진적 남북 합의통일	급진적 남북 합의통일	점진적 남한 주도 통일	급진적 남한 주도 통일
미 국	16	0	81	3
일 본	36	0	62	2
중 국	44.7	0	47.4	7.9
러시아	27	0	70	3

이 점은 중국이 북한 붕괴를 상정한 한국주도의 통일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주도의 통일보다 남북합의 통일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반도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북한 핵문제와 북한의 폐쇄 정책보다 남북한 상호불신을 지목한 비율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I

II

III

〈표 III-6〉 한국 통일공공외교의 장애요인

(단위: %)

	주변국의 우려	북한 핵문제	북한의 폐쇄정책	남북한 상호불신	남북주민의 통일 거부감	기타
미국	23	26	16	23	3	9
일본	5	31	14	38	7	5
중국	13	24	10	50	0	3
러시아	5	38	8	38	0	11

아마도 북한과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정서와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중국 내에 상대적으로 높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 주도의 점진적 통일을 지지할 수 있도록 통일편의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전략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북한만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기보다 한반도를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국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 내용과 진척과정에 따른 설득 및 홍보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한국이 보유한 공공외교의 자원을 중국에 대한 통일공공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파워 자산의 개발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수행과정에서 문화 및 경제 발전의 경험이 자산으로 활용된 예는 정보 및 지식의 활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물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와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일부 기업의 브랜드와 상품은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어 넓은 의미의 통일공공외교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인의 인식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한국 주도의 통일 지지로 연결될 수 있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문화와 경제적 자산을 통일공공외교와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 및 경제교류를 통해 제고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우호적 감정을

경제적 수익 창출에만 활용하는데 천착하지 말고, 우리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중국 내 여론을 움직여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중국의 협조를 얻는 데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통일관련 내용 및 이슈를 중국에 일방적으로 전달, 이해시키기보다 중국의 통일문제와 한반도 통일관련 내용 및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는 대표적인 한국기업들이 실질적인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협력의 통일기업 이미지를 만들고 남북한 및 중국의 3자 협력적 접근을 추구할 경우, 점진적 남북합의 통일방식을 선호하는 중국 국민과 정부의 지지를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스포츠 행사의 남북한 동시개최 및 입장, 공동응원과 DMZ 생태공원의 관광자원화 등도 중국의 남북화해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매체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주요 매체는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 등 지식자원을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포럼 등 회의체 및 강연, 연구 등 인적 교류에 편중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내용이 중국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가 한정적임을 의미하며 다양한 매체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물론 공연, 전시 및 스포츠, 관광행사 등 다양한 수단과 매체의 개발은 우리의 자원 및 자산 활용과 깊은 관련이 있고 함께 연동되어야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매체 이외에도 라디오, TV, 인터넷 매체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매체들은 광범위하고 불특정한 중국의 일반 대중에게 효과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강점인 지식이나 문화 자산을 IT기술과 접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민족주의와 민주화 등 체제 파급 효과가 있는 이슈에 대해 SNS 사용 제한 및 인터넷 언론 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⁸¹ 한국의 강점과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 SNS를 활용한 접근이 중국 내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며, 인터넷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접근도 우리의 의도대로 통용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통매체와 구미디어를 활용한 틈새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어의 활용이다.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 한국어 및 영어를 위주로 하며, 중국어의 사용은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통일공공외교가 중국의 일부 전문가와 조선족, 그리고 한국어에 관심 있는 일부 중국인에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일반 대중에게 북핵 및 대북정책 등 한반도의 현실을 이해시키고 한반도 통일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중국어 자료를 발간하거나 중국어 방송과 보도를 확대하고 중국어 사용 가능자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5) 대상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는 여론주도층을 주요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물론 우리의 대북 및 통일정책을 중국 국민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식을 갖추고 여론 및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정치체제와 북한과의 이해관계

⁸¹ Eunju Chi, "The Chinese Government's Responses to Use of the Internet," *Asian Perspective*, Vol. 36, No. 3 (2012), pp. 387~409.

차이로 인해 한반도 문제와 통일관련 문제에 대해 서로 상이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게다가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가 자국민에게 조금 또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타국 전문가의 그것에 비해 매우 높게 나온 조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Ⅲ-7〉 해당국 국민들의 한반도 상황 인식에 대한 기여도

(단위: %)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	도움을 주지 않았다	잘 모르겠다	조금 도움을 주었다	매우 도움을 주었다
미국	9.7	29	16.1	41.9	3.2
일본	7.1	54.8	23.8	14.4	0
중국	8.3	20.8	4.3	20.8	45.8
러시아	2.7	32.4	18.9	43.2	2.7

그러나 우리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대상은 북경, 상해와 같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일부 인사에 중복되어온 특징을 보여 온 바, 중국 내 정책 및 여론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의 풀을 확대, 확충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수도인 북경과 경제중심지인 상해의 비중은 적지 않으며 중요한 지역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56개의 다민족 국가로 구성된 중국은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하더라도 31개의 행정구역에 약 13억 인구가 포진해있다. 게다가 지역별 발전수준과 관심사항이 다르며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영향은 지역별로 커다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북경과 상해보다 중요성은 떨어질지라도 요녕성과 길림성은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북한과의 교류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중국 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의 선정과 이와 관련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세대교체 중인 중국

I

II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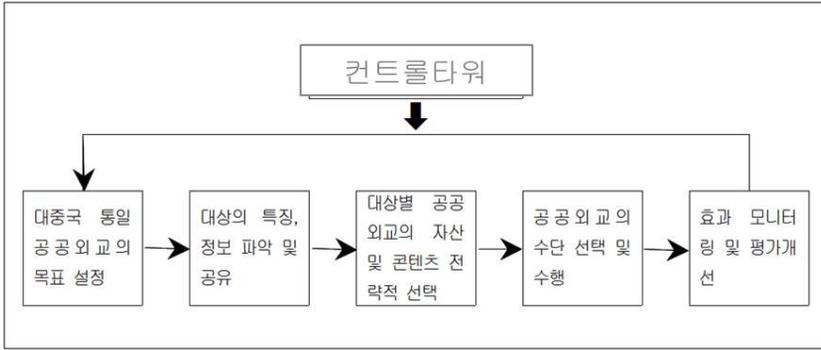
내 한반도 전문가를 새로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록 중국의 차세대나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가동되고 있지만, 아직 초보적이고 시작단계에 있는 만큼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장기적 플랜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반한이나 혐한 감정을 품고 귀국하는 것보다 한국에 대한 호감이나 이해심을 품고 귀국하는 것이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내 한국교민이나 조선족을 상대로 하는 우회적인 접근도 넓은 의미의 통일공공외교의 일환인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이들이 중국인과 접촉하면서 통일공공외교의 행위자로서 민간외교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조선족은 이중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중국인에 비해 한반도 통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언어적 강점도 있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통일공공외교의 개인 행위자로서의 역할도 가능할 수 있다.

이처럼, 통일공공외교 대상의 다변화는 우리의 통일공공외교가 중국 국민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 한반도 통일에 유리하도록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중국의 북핵이나 한반도정책에 대한 국내 여론의 영향력이 일반 민주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언론에 대한 통제력은 상대적으로 강한 점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정책 및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학자 및 관료 등 전문가를 주요 타깃으로, 일반대중을 보조 타깃으로 삼되, 향후 국내여론이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의 증가 추세를 반영, 중장기적으로는 주 타깃을 여론주도층에서 일반대중으로 점차 확산하는 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은 향후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주요 대상에 대한 질문에서, 학자 및 전문가, 정치인, 일반국민, 언론의 순으로 응답한 전문가인식조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과제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의 과제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규륜 외.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분석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12-02.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김기정.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 연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과제, 2012.
- 김병로 외. 『북한-중국간 사회·경제적 연결망의 형성과 구조』.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08.
- 동북아역사재단. 『2010년 한·중일 역사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0.
- 문정인. 『중국의 내일을 묻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 박영호 외.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KINU 연구총서 11-11.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_____.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박철희. 『한국공공외교 추진체계 연구 및 전략수립』. 한국국제교류재단 용역보고서. 2011.
- 신중호. 『한국의 문화외교 강화를 위한 추진전략 및 지역별 차별화 방안』. 외교통상부 연구용역과제, 2009.
- 이교덕 외. 『중국의 대한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이동률 외. 『중국인의 한국인식과 한국의 對중국 공공외교 강화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對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0-03-34.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0.
- 이세기. 『이세기의 중국 관계 20년』. 서울: 중앙북스, 2012.
- 임강택·김철·민해봉.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외교부. 『2013 중국개황』. 서울: 늘품플러스, 2013.
- 전병곤·양갑용.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전병곤 외. 『한·중일간 외교안보협력관계 비교 분석과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12-02-04.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전성홍. 『중국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중관계의 실질적 개선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對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 총서 11-03-23. 서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진행남. 『신한류를 통한 공공외교의 활성화방안』.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2.
-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한국위원회.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백서』. 서울: 한·중 전문가 공동연구위원회 한국위원회, 2012.
- 金夏中. 『騰飛의 龍』.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2.
- 申相振. 『韓國對北韓包容政策與中國』.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齊建華. 『影響中國外交決策的五大因素』. 北京: 中央編譯出版社, 2010.

2. 논문

- 김순태. “한국군의 군사외교 활동에 관한 연구: 공공외교의 관점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2권 제2호 (동서문제연구원), 2010.
- _____.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JPI정책포럼』. No. 2011-3 (제주 평화연구원), 2011.
- 김태환. “한국 공공외교 수행체계와 통일공공외교의 분석틀.” 황병덕 외.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Ⅱ):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마영삼. “공공외교의 현황과 우리의 정책 방향.” 『JPI정책포럼』. No. 2011-27 (제주평화연구원), 2011.
- 민귀식. “재한 중국인 유학생 현황과 한국생활 적응 및 갈등.” 『한·중 INChina Brief』. Vol. 246 (인천발전연구원), 2013.
- 변창구. “한국의 對중국 통일외교: 콘텐츠와 전략.” 『통일전략』. 제12권 제4호

- (한국통일전략학회), 2012.
- 신경진. “뜨거운 한·중 간 역사, 문화 논쟁, 차갑게 바로보기.” 정재호 편. 『중국을 고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 이동률. “중국 비전 2020-초강대국화 전략의 과제.” 이동률 편.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1.
- _____. “중국민족주의 고조의 대외관계 및 한·중관계 영향.” 『중소연구』. 제35권 제4호 통권 132호 2011/2012 겨울 (한양대학교 아태연구센터), 2012.
- _____. “북한문제와 한미중협력.” 이태환 편. 『한반도 평화와 한미중 협력』. 세종정책총서 2010-2. 서울: 세종연구소, 2010.
- _____. “수교이후 한·중 정치관계의 회고와 전망: 중국외교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소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95호 (한양대학교 아태연구센터), 2002.
- 이창형. “북핵과 중국의 핵심이익.” 『KIDA 동북아안보정세분석』 (한국국방연구원), 2013.
- _____. “전략적 협력동반자 시대의 한·중 군사관계 발전 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420호 (한국국방연구원), 2012.
- 정기용. “스포츠와 공공외교 수렴가능성의 모색.” 『동서연구』. 제21권 제2호 (동서문제연구원), 2009.
- 진행남.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증진방안: 한국의 공공외교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No. 2013-03 (제주평화연구원), 2013.
- Chi, Eunju. “The Chinese Government’s Responses to Use of the Internet.” *Asian Perspective*. Vol. 36, No. 3, 2012.
- Fewsmith, Joseph and Stanley Rosen. “The Domestic Context of Chinese Foreign Policy: Does Public Opinion Matter?.” David M. Lampton (ed.). *The Making of Chinese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Era of Reform*.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Jun, Byoungkon and Kim Jangho. "China's Role and Perception of a Unifies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5, No. 3, September 2013.

Lee, Dongryul. "China's policy and influence on 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denuclearization and/or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2, No. 2, June 2010.

Pak, Kiejoon. "China's Cost-Benefit Analysis of a Unified Korea: South Korea's Strategic Approaches."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6, Issue. 2, Fall/Winter 2012.

李建明. "韓國民族主義及其影響下的中韓關係." 『學理論』. 18期, 2008.

李敦球. "冷戰後中韓關係的發展與東北亞格局－中韓建交15年來雙邊關係的回顧與展望." 『當代韓國』. 第2期, 2007

王生. "試析當代韓國民族主義." 『現代國際關係』. 2期, 2010.

王曉玲. "中韓民衆間的相互認識以及好感度影響因素." 『동아연구』. 제63권, 2012.

王存剛. "當今中國的外交政策: 誰在制定? 誰在影響?." 『外交評論』. 2012年第2期, 2012.

張琏瑰. "朝鮮半島的統一與中國." 『當代亞太』. 第5期, 2004.

趙立新. "敏感、戒備和對抗－20世紀90年代以來中韓學者民族主義研究的相互審視." 『국제지역학논총』. 제3권 제1호. 국제지역연구학회, 2010.

"盧武鉉總統在清華大學的演講." 2003.7.9.

3. 기타자료

EAI·ARI. "2011 한·중 국민 상호인식조사." 비공개자료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세계일보』.

The Financial Times.

『人民日報』.

『環球時報』.

『成均中國觀察』.

<<http://www.mofa.go.kr>>.

<<http://www.nuac.go.kr>>.

<<http://www.knda.go.kr>>.

<<http://ifes.kyungnam.ac.kr>>.

<<http://tongil.snu.ac.kr>>.

<<http://kr.dlufl.edu.cn>>.

<<http://www.campusasia.kr>>.

<<http://news.takungpao.com>>.

<<http://zqb.cyol.com>>.

<<http://www.sina.com.cn>>.

연구총서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종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외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 (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 (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 (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용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C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협동연구총서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종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Ⅰ)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근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Ⅱ)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전병근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기타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빈곤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02)	조한범 외	17,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2013-01	2013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전성훈 외
2013-02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	전성훈 외
2013-03	시진핑 체제의 출범과 대내외정책 방향: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전병곤, 이기현
2013-04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논의 동향	박형중, 박영호, 김동수
2013-05	대북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북정책에의 함의	임강택
2013-06	한미정상회담 결과 분석	김규륜 외
2013-07	한중정상회담 결과 분석	이기현
2013-08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평가와 우리의 대응방향	박영자
2014-01	2014년 북한 신년사 집중분석	박형중 외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암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4,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1. 한반도 통일공공외교 추진전략(II)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 (총괄보고서)
2. 한국의 對미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3. 한국의 對중국 통일공공외교 실태
4. 한국의 對일본 통일공공외교 실태
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공공외교 실태